

ISBN 979-11-85663-94-4

연구-기본-22-03

#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김문정 · 박영란 · 김여진 · 이청아 |



**【책임연구자】**

김문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박영란 강남대학교 교수

**【연구보조】**

김여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원

이청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004년 도입된 노인일자리사업은 그간 노인세대 특성변화, 정책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일자리사업 유형 다변화 및 수행체계 다변화 등을 통해 참여자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방식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지역적 여건이 각기 다른 노인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된다면 일자리사업이 최종적으로 시행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 특성이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지역주체들이 중심이 되는 사업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행 중앙정부 주도 방식의 노인일자리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완화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집중하여, 지역이 중심이 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가 향후 지역중심의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운영기반 조성과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과제는 우리원 김문정 부연구위원이 책임연구자로 연구총괄을 담당하였으며, 강남대학교 박영란 교수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청아 연구원이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북연구원 이중섭 박사가 전문가의 시각에서 원고작성에 기여해 주었습니다.

본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준 한신대학교 주경희 교수, 총신대학교 전미애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 박사에게도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연구과제를 통해 지역중심 노인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준 12명의 수행기관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 12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김 미 곤

# 목 차 <<

<b>요 약</b> .....	v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7
<b>제2장 선행연구 검토</b> .....	9
제1절 지역중심 일자리 개념 .....	11
제2절 지역중심 일자리정책 추진기반 및 요인 .....	15
제3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운영 상 한계 및 쟁점 .....	18
<b>제3장 지역중심 중장년 일자리 정책사례</b> .....	25
제1절 전북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사례 .....	27
제2절 서울시 50+재단 중장년일자리사업 운영체계 및 추진현황 .....	42
제3절 소결 .....	46
<b>제4장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운영실태 및 쟁점</b> .....	49
제1절 조사개요 .....	51
제2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사업 필요성 및 충분성 인식 .....	53
제3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 .....	56
제4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운영주체별 역할과 기능 .....	61
제5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통합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확장 가능성 .....	68
<b>제5장 결론 및 제언</b> .....	77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언 .....	79
제2절 후속연구 제언 .....	86

부록.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현황 .....	88
참고문헌 .....	93
Abstract .....	95

**표 목차 <<**

〈표1-1〉 연구구성 및 추진방법 .....	8
〈표2-1〉 재정지원 방식에 따른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 .....	18
〈표3-1〉 전북지역 노인일자리 운영을 위한 인력구성 현황 .....	28
〈표3-2〉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주요사업 현황 .....	30
〈표3-3〉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 현황 .....	31
〈표3-4〉 2021년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직업교육현황 및 취업연계 성과 .....	32
〈표3-5〉 2021년 전라북도 베이비붐세대 및 노인일자리 관계자 교육과정 운영 .....	33
〈표3-6〉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	36
〈표3-7〉 노인 작업공방 설치 운영 현황 .....	37
〈표3-8〉 전라북도 민관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주요사업 현황 .....	38
〈표3-9〉 민관학 연계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	40
〈표3-10〉 서울시 50+재단 상담, 교육, 일자리 연계 주요 사업 .....	42
〈표4-1〉 FGI 조사 개요 .....	50
〈표4-2〉 FGI 참여자 정보 .....	51
〈표5-1〉 노인일자리 재정지원체계 장단점 비교 .....	81
[부록표1]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	88
[부록표2] 지역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배정량 .....	89
[부록표3] 지역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	90
[부록표4] 지역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정현황 (지자체경상보조사업) .....	91
[부록표5] 지역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운영 현황(지자체경상보조사업) .....	92

그림 목차 <<

<그림1-1> 노인일자리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 3  
<그림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핵심전략 및 추진과제 ..... 4  
<그림1-3>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지역일자리 활성화 방향 ..... 5  
<그림2-1> 지역일자리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 12  
<그림2-2> 지역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체계 ..... 14  
<그림2-3> 사업량 기준 변수와 사업배정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 21  
<그림2-4> 국고보조금사업 대비 공모형 사업 비중 ..... 22  
<그림3-1>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주요사업 현황 ..... 30  
<그림3-2>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직종별 현황 ..... 36  
<그림3-3>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어플 ..... 39  
<그림3-4> 50+재단 운영주체별 역할 및 기능 ..... 43  
<그림3-5> 서울시내 50+캠퍼스 및 센터 설치 현황 ..... 44  
<그림4-1> 현행 노인일자리 디지털 플랫폼 ..... 68  
<그림4-2> 노인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참여 신청 ..... 71  
<그림4-3> 일반 조직의 디지털 전환 단계 개념도 ..... 73  
<그림4-4> 민간 영역의 플랫폼 예시 ..... 74  
<그림4-5> 연령대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 ..... 75  
<그림5-1> 지역자율형 계획 예산 운영 예시 ..... 82  
<그림5-2> 디지털 기반 노인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안) ..... 85



##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일자리사업이 지향하는 수요자 접근성 강화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노인의 특성(Aging in Place) 을 고려할 때,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수요에 기반하여 다양한 사회활동 및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22년 기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전국 1,291개소이며, 기초지자체 단위의 수행기관을 통해 약 73만명의 노인이 일자리에 참여함.
- 그간 수행기관 단위에서 벗어나 지역단위에서 수요공급적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기반을 확보하고자 광역단위의 거점기관(통합지원센터, 지역본부 등)도 점차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개별 수행기관 단위에서 공공부문 위주, 획일적/단순근로 중심의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함(변금선 외 2018; 김수린 외 2019).
- 노인일자리사업 전달 및 운영체계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은 기초지자체단위의 수행기관으로 사실상, 지역중심의 일자리를 개발, 운영, 관리하고 있음. 현 운영체계는 '지역'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개별 수행기관'이 중심이 되어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 연계를 통해 지역에서 스스로 노인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발굴, 운영, 관리 할 수

2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있는 기반 조성에 집중하여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및 운영체제상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둬.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아이템을 제안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성 있는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추진 개요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중심의 중장년 일자리 사례분석을 통해 운영체제와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장 전문가 및 유관 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조사를 통해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추진 상 한계와 개선방향을 탐색함.

□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추진방법은 아래 표와 같음.

〈요약표1〉 연구구성 및 추진방법

구분	구성	내용	방법
1	지역중심 일자리 개념이해	- 지역중심 일자리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지역중심 일자리 정책 추진 방식(운영체제, 전달 체계) 검토	문헌검토
2	지역중심 중장년 일자리 정책 사례분석	- 지역중심 중장년 일자리사업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추진방식,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의견
3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운영실태 및 쟁점	- 노인일자리 추진 방식 (운영체제, 전달체계) 검토 -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인식 검토 - 지역중심 노인일자리사업 통합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 가능성 검토	FGI 조사 자문의견, 문헌검토
4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운영주체별 역할, 기능 재정립 방안 제언 - 지역중심 사업운영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활용방안 제시	

## ■ 주요 연구결과

### 1.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추진 한계

- (중앙중심의 하향식 전달체계) 노인일자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앙-시도-시군 구-수행기관-참여노인(수혜자) 및 수요처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지님. 이러한 전달체계 구조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 사업 운영 계획, 관리 감독 권한이 하향식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하향식 전달체계로 인해 지역(지자체)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수행보다는 지역 내 사업총괄, 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등의 기능만을 한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요구하기 어렵고, 지역 중심의 노인일자리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보편적인 사업운영 방식에 따른 지역자율성 한계) 노인일자리사업은 보편성에 기반하여 정해진 사업량과 사업유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기획 및 실행, 운영이 어려움. 또한, 사업량 배분방식에서도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지역 네트워크 협업체계 미흡)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모집에서부터 수요처(수요자, 기업 등) 개발 및 발굴, 참여노인 교육 및 훈련, 일자리 연계, 참여자 관리 등 사업수행과정 전반을 관장하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의 전문성, 연속성 등이 취약하여 긴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어려움.
- (디지털 기반 인프라 미흡) 현행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및 일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인프라는 타 정부기관 일자리 플랫폼에 비해 그 기능이

#### 4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

매우 단순화 되어 있고, 일자리 수요공급에 대한 정보공유나 연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노인일자리사업내에서 디지털 활용은 매우 제한적임.

### 2.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

- (지역단위의 사업 추진 근거 및 기반 조성) 노인일자리사업이 법적 근거가 여전히 미흡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공공성, 공익성이 부족하여 일자리 발굴 및 매칭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광역단위)에서 조례 지정 등을 통한 추진 근거 마련 필요.
- (지역 중심의 사업운영 자율성 확보) 역내 노인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자율성과 책임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보조금) 확보 필요. 더불어, 사업기획 및 실행,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 역량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형 사업을 통한 기획, 운영의 자율성 필요.
-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확대) 제도상에는 지역협의체 및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갖추어져 있으나, 여타 지역복지사업이나 지역일자리 사업과 비교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지역거버넌스 체계가 미흡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 부족
- (지역별 통합정보제공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인프라 활성화) 지역주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 중심으로 조직 운영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함.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수요자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과 사업수행 인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을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3.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한 운영 주체별 역할과 기능

- (중앙정부) 지역주도성(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기반 조성,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적, 정책적 변화에 대응기반 마련 등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응기반 마련
- (광역지자체) 광역단위의 노인일자리 추진 기반 마련,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운영 가이드라인 및 교육과정 마련(기초지자체에서 사업운영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및 네트워크 기반 마련).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고 광역 단위 유관기관과의 협업, 소통 체계 마련
- (기초지자체 및 수행기관) 수행기관은 광역단위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운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에 집중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

### ■ 정책적 제언

-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함.
- 지역자율성 및 적극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 중앙중심의 정책을 지역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해당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준과 지역에서 자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중요함. 이러한 맥락에서, 광역단위 및 기초단위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여 사업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모형 사업의 활성화를 제안함.

## 6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

### □ 광역 및 권역별 노인일자리 컨트롤타워 중심의 지역거버넌스 구축

- 광역 및 권역단위의 전담기관을 통해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함. 중앙과 지역 간에는 광역단위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기획,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 □ 지역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제안 및 지원체계 마련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 하고, 지역유형별 노인일자리 추진 모형을 제안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지역 유형화에 따른 맞춤형 노인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임.
- 기초지자체 수준의 소규모 지역에서도 지역유형화를 통해 제시된 일자리 모형을 토대로 몇 가지 선택 가능한 사업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정책 수단 조합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등 상위 수준의 정책을 기획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 디지털 기반 노인일자리사업 통합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 수행기관 단위에서 지역단위 일자리의 양적, 질적 확충을 위해서 지역 내 일자리 정보공유 및 정보 접근성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기반 노인일자리 플랫폼을 구축, 활용함으로써 기초지자체 단위의 일자리 정보, 광역단위의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구인구직 매칭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도입 이래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음. 특히 최근 5년간 사업량 확대, 사업 유형 다변화 등을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해오면서 일자리사업의 성과 및 효과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이 확대됨.

〈그림1-1〉 노인일자리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단위 : 개, 억원)



자료: 20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한국노이인력개발원.

- 그러나 공공부문 위주, 획일적 중앙주도, 단순 근로 중심의 일자리정책의 성과가 한계에 이르면서 지역중심의 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음.

4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노인일자리의 지속성, 확장성 확보 차원에서 지역에서 스스로 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로 지역수요에 맞는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일자리) 확대 계획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1-2〉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핵심전략 및 추진과제

전략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핵심과제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li> <li>· 공 사적연금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li> <li>· 고령친화 금융환경 구축</li> </ul>	<p><b>추진과제 2-1-1.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li> <li><input type="checkbox"/>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li> <li><input type="checkbox"/> 노인일 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공익활동형 일자리 확충 ('17 43.7만개 → '21 80만개)</li> <li><input type="checkbox"/> 베이비부머의 특성과 지역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및 참여기준 완화, 민간형 일자리 비중 확대</li> </ul>
	예방적 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li> <li>· 방문형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활성화</li> <li>· 치매노인 종합적 관리 지원</li> </ul>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복귀지원</li> <li>·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제고</li> <li>· 의료·요양 기능 조정 및 적정이용 유도</li> </ul>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령친화적 주택 공급 및 교통복지기반 구축</li> <li>· 고령친화커뮤니티 확산</li> </ul>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 높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li> <li>· 생애말기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li> </ul>	

자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0.12. 일부를 발췌하여 필자 작성.

- 현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체계 강화(국정과제 45)’에서도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10년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중앙집권적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적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까지 연구자나 정책 담당자,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 지방분권화 방식의 일자리 정책추진과 고용서비스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임. 현 시점에서는 분권화 방식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실행과제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판단됨.

- 현 정부 정책방향에 지역일자리 역량강화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양하게 제시됨에 따라 향후 일자리 정책은 지역중심의 일자리 활성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1-3〉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지역일자리 활성화 방향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분권-균형발전)

약속 2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약속 2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약속 2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1.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강화 112.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11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11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소통, 협력 강화	115.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116.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117. 지역맞춤형 창업 혁신 생태계 조성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119.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20.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자료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년 5월. 일부 발췌하여 필자 작성.

- 이러한 사회정책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식의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함.

- 현 정부 정책방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노인일자리사업이 지향하는 수요자 접근성 강화 관점에서 지역사회 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노인의 특성(Aging in Place)을 고려할 때, 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다양한 사회활동 및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체제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 및 운영체계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은 기초지자체단위의 수행기관으로 사실상, 지역중심의 일자리를 개발, 운영, 관리하고 있다고 보여 질 수 있음. 그러나 현 운영체계는 ‘지역’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개별 수행기관’이 중심이 되어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사업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그간 수행기관 단위에서 벗어나 지역단위에서 수요공급적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기반을 확보하고자 광역단위의 거점기관(통합지원센터, 지역본부 등)도 점차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개별 수행기관 단위에서 공공부문 위주, 획일적/단순근로 중심의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함(변금선 외 2018; 김수린 외 2019).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 스스로 노인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 발굴, 운영, 관리 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집중하여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및 운영체계상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둬م.
  -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아이템을 제안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성 있는 운영기반 조성에 집중함.
  -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및 운영체계의 한계를 검토하고, 주요 운영주체별 역할,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탐색함.
  - 더불어, 지역중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안하고자 디지털, 온라인 활용방안을 제안함.
- 본 연구는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추진 방식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실행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연구적 의의가 있음. 본 연구결과는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중심의 노인일자리 양적, 질적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표1-1과 같이 연구내용을 구성하고 연구내용에 적합한 연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적용함
- 문헌 검토(선행연구 검토)
  - 지역중심 일자리에 대한 이론적 개념 및 정책적 개념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역중심의 일자리 지원사업 전달체계 및 운영체계를 검토함.
- 지역중심 일자리 정책 사례조사
  - 지역주도형 중장년 일자리 대표 사례로 1) 전북형 노인일자리사업과 2)서울시 50+재단 중장년 일자리사업 운영체계 및 추진현황을 검토함. 이를 토대로 향후 지역이 중심이 되는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 FGI (Focus Group Interview) 조사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조사를 수행함. FGI를 통해 현장에서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운영체계 상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함.
    - 기존 노인일자리 운영체계를 기준으로 지역중심 노인일자리가 추진되기 어려운 구조적, 제도적 한계 및 문제점 탐색
    -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양적, 질적 확충에 대한 필요성, 충분성에 대한 현장의견 수렴
    - 향후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운영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을 검토하고, 중앙단위, 광역단위, 기초지자체 단위의 운영주체별 역할과 기능, 추진방향성에 대한 의견 수렴

8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표1-1〉 연구구성 및 추진방법

구분	구성	내용	방법
1	지역중심 일자리 개념이해	- 지역중심 일자리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지역중심 일자리 정책 추진 방식(운영체계, 전달 체계) 검토	문헌검토
2	지역중심 중장년 일자리 정책 사례분석	- 지역중심 중장년 일자리사업 대표사례를 중심으로 추진방식,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문헌검토 전문가 자문의견
3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운영실태 및 쟁점	- 노인일자리 추진 방식 (운영체계, 전달체계) 검토 -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인식 검토 - 지역중심 노인일자리사업 통합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확장 가능성 검토	FGI 조사 자문의견, 문헌검토
4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한 정책적 제언	-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운영주체별 역할, 기능 재정립 방안 제언 - 지역중심 사업운영을 위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 활용방안 제시	

# 제 2 장

##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지역중심 일자리 개념

제2절 지역일자리정책 추진기반 및 요인

제3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운영 상 한계 및 쟁점





# 2

## 선행연구 검토 <<

-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중심 일자리의 개념을 토대로 지역중심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하고, 지역중심 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반 조성차원에서 필요요소를 검토함.
- 더불어,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역중심으로 수행함에 있어 제도적, 구조적 한계와 쟁점에 대해 살펴봄.

### 제1절 지역중심 일자리 개념

#### 1. 고용정책 관점에서의 개념

- 지역고용정책의 개념은 고용노동부에서 활용하는 개념으로 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진단하고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함(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 지역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최종 전달체계는 지역 단위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일자리 문제와 해소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운영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이규용 외, 2018).
- 정부주도의 일자리사업들이 소위 ‘일자리위기’ 상황에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경제의 일자리창출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일자리사업들이 수립·전달·실행되는 지역단위의 전달체

계와 거버넌스의 효율화를 통해 사업성과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윤윤규, 2010).

〈그림2-1〉 지역일자리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출처 : 고용노동부 지역일자리 네트워크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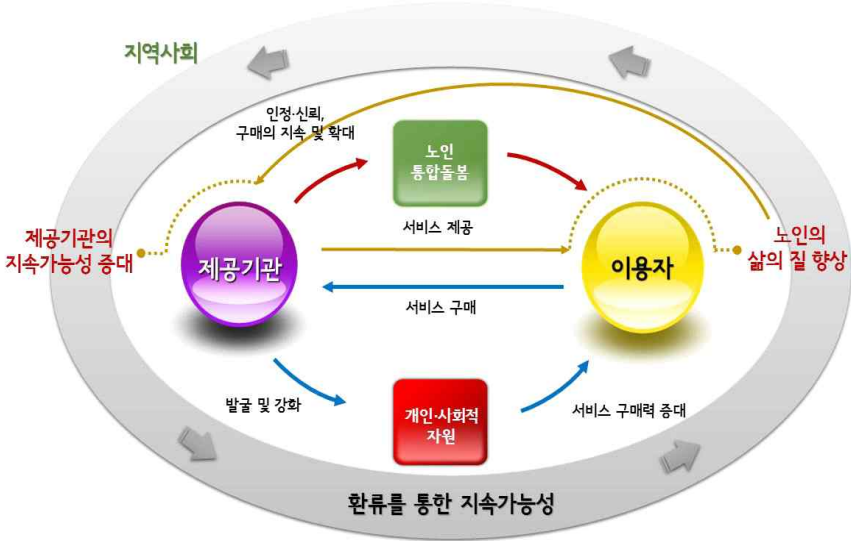
- 지역중심 일자리에 대한 개념은 운영주체와 정책 범위에 따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개념에 따라 중앙정부의 일자리정책의 운영과 집행에 대한 책임 주체(=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노동복지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광의의 개념에서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 고용관련 단체와 기구’로 보고 지역고용문제해결을 위해 펼치는 다양한 정책을 지역중심 일자리정책으로 간주함(전현중 외 2008). 광의의 개념에 따른 지역중심 일자리정책 범위는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노동시장정책, 인력개발정책, 임금정책, 노동복지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함.
  - 한편, 협의의 개념에서 운영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차원의 일자리정책과는 별도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특정 대상 혹은 지역의 일자리문제에 특화하여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배무기, 1981 ; 김성중 외 2005; 전명숙 2010 재인용). 즉, 협의의 개념에서 지역중심 일자리정책 범위는 지역의 고용유지 및 안정, 실업자에 대한 생계 보조 및 실업자 재취업에 관련한 일련의 정책으로 교육훈련사업이나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한정함(전명숙, 2010).

## 2. 지역기반 복지정책 관점에서의 개념

-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지역사회기반(community-based) 접근을 필요로 함. 지역사회기반 모델은 협동적인 생활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고취하는 접근임(김형용, 2010).
- 지역기반 모델은 민간 시장이나 중앙정부 주도의 서비스와 달리, 제3섹터의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욕구를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는 공동체적 운영 원리를 마련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지역사회 제도와의 연계를 지향하기 때문에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지역기반 복지정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상호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주민이 참여하여 대등한 관계에서 서비스 이용자이자 생산자가 되며, 지역주민과 자신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의 서비스보다 전담인력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시장과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하는 질 높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지역기반 복지정책은 서비스 이용자가 수동적인 수혜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공급자, 수요자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이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신뢰, 인정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14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그림2-2〉 지역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체계



출처 : 석재은 외. (2017).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산 연구.

## 제2절 지역일자리정책 추진기반 및 요인

- 지역중심의 일자리정책의 사회적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전제조건이 충분하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예컨대, 서비스 전달의 질에서의 불균등성에 따라 성과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체계성이 약화될 수 있음. 또한, 지역에 따른 서비스 접근권에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 간 고용격차, 일자리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이규용 외, 2014).
-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일자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정리하면, 1) 공공의 제도적 기준, 2) 지역단위의 역량 및 재정자립 기반, 3) 지역거버넌스 운영 주체간 연계(네트워크)로 볼 수 있음(이병숙 외, 2008; Potter, 2012; 이규용 외, 2014; 고경호, 2021).
- 이상의 전제조건은 지역기반 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과도 맞닿아 있음. 특히, 지역거버넌스 운영 주체간 연계 및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지역기반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연대는 매우 중요한 성공조건으로 제시됨(석재은 외, 2017).
  - 다양한 자원 동원 등은 지역사회안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성 및 거버넌스 구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지역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강조됨(이현진 외, 2015; 지규옥, 2015).

### 1. 공공의 제도적 기준

- 중앙중심의 정책을 지역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해당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준으로 관련 조례 제정이 수반되어야 함.
- 조례의 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전제조건이며, 사업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정당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음 (Mok and Park, 2008; Tae and Park, 2010)..

- 예컨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마을만들기 정책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1) 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사업의 내용과 범위, 3) 마을공동체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방법, 4) 사업지원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근거와 지원사항에 대한 핵심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부여함.

## 2. 지역 단위의 역량 강화 및 재정 자립도 확보

- (지자체 전담인력 역량강화) 일자리사업이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지역중심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운영주체 중에서도 지자체 전담 공무원 (광역단위 또는 기초지자체 단위 공무원)의 의지와 역량이 매우 중요함.
  -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광역단위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단위의 공무원의 실천 의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정 기간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보직 기간의 부여 및 준수 등을 통해 실천 의지와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고경호, 2021).
- (수행기관 전담 인력 역량 강화) 일자리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수행기관 (수행주체가 되는 기관)은 지역사회, 정책수혜자(당사자), 수요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체로써 전문성, 자율성, 교섭력, 재정력 등 다양한 역량 확보 및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다만, 수행기관 등 민간조직의 역량이 취약하거나 지역적으로 인적, 물적 인프라의 한계로 전담인력의 업무적 수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수행체계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지역중심의 재정 기반 강화) 지역에서는 정책적 인큐베이팅 관점에 입각하여 수행기관이 재정적 자립의 도모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구조의 창출 기회를 적극 지원해야 함. 별도의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3. 지역거버넌스 및 산·관·학·연 네트워크 기반

- 지역혁신, 지역주도 등 지역이 주체가 되는 용어는 정책이 상향식으로 계획되어 수립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듯 보이지만 계획 내용과 선정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위로부터 하향식 계획으로 수립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이상호 외, 2021).
- 이러한 탑다운 방식(Top-down)의 운영체계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중심의 정책 운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주체 간의 상호작용, 학습 네트워크를 활성화에 집중해야 함.
- (지역거버넌스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운영주체 간의 연계, 협업,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사업추진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함. 더불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체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함.
  - 예컨대, 제도적 기반으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체계성을 확립할 수 있음. 조례 상에 지역 내 전담부서 및 관련 부서 간의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민관협력에 기반한 정책 및 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음(성문주, 2021; 고경호, 2021).
- (운영 주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정책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다양한 부처 간 협업과 동시에, 지역내 산·관·학·연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전담기구(중간지원조직)가 필요함(정한나 외, 2019).

### 제3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운영 상 한계 및 쟁점

#### 1. 중앙중심의 하향식 전달체계상의 한계

□ 노인일자리사업은 예산유형(지자체 경상보조1), 민간 경상보조2)에 따라 운영주체가 이분화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시도-시군구-수행기관-참여노인(수혜자) 및 수요처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지님. 이러한 전달체계 구조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예산, 사업 운영 계획, 관리 감독 권한이 하향식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2-1〉 재정지원 방식에 따른 추진체계 및 사업내용

	유형	사업내용	전달체계
지자체 경상보 조	공익활동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	복지부→지자체(시·도, 시·군·구)→수행기관
	사회서비스형	아동시설지원, 청소년시설지원, 장애인시설지원, 취약가정시설지원, 노인시설 지원 등	
	시장형사업단	식품제조 및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매장운영, 지역영농, 운송 등	
민간 경상보 조	재능나눔	노인 안전예방, 상담안내, 학습지도, 문화예술 등	복지부→위탁기관→수행기관(위탁기관 :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 1) 지자체 경상 보조를 받는 사업으로는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업이 속함. 운영 및 수행체계는 다음과 같음. 1단계는 '기본계획수립' 단계로,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예산을 배분함. 광역 시·도는 시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을 배분함.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기관별사업량, 예산 및 전달인력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함. 2단계는 '사업운영계획수립' 단계로,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을 등록하고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로부터 심사 및 승인을 받음. 3단계는 '사업추진준비' 단계로, 수행기관은 참여자를 모집 및 선발하고 참여자가 일할 수요처를 개발 및 선정함. 4단계는 '참여자가교육' 단계로, 수행기관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활동에 필요한 소양 및 활동 교육을 실시한다. 5단계는 '사업관리' 단계로,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활동 및 근무에 따라 활동비 및 임금을 지급함. 6단계는 '사업평가' 단계로, 수행기관은 참여자, 수요처, 서비스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자체 사업평가를 실시함.
- 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사회서비스형 서논모델, 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 고령자친화기업 등 주로 민간 일자리사업이 속함.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기관, 기업 등)을 통해 추진됨. 여기서 지자체상보조사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는 것이 특징임. 보건복지부 단계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량을 조정하고 국고를 지원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성과평가, 동향분석 및 조사연구, DB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수행기관 단계에서는 각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기관 또는 기업에 위탁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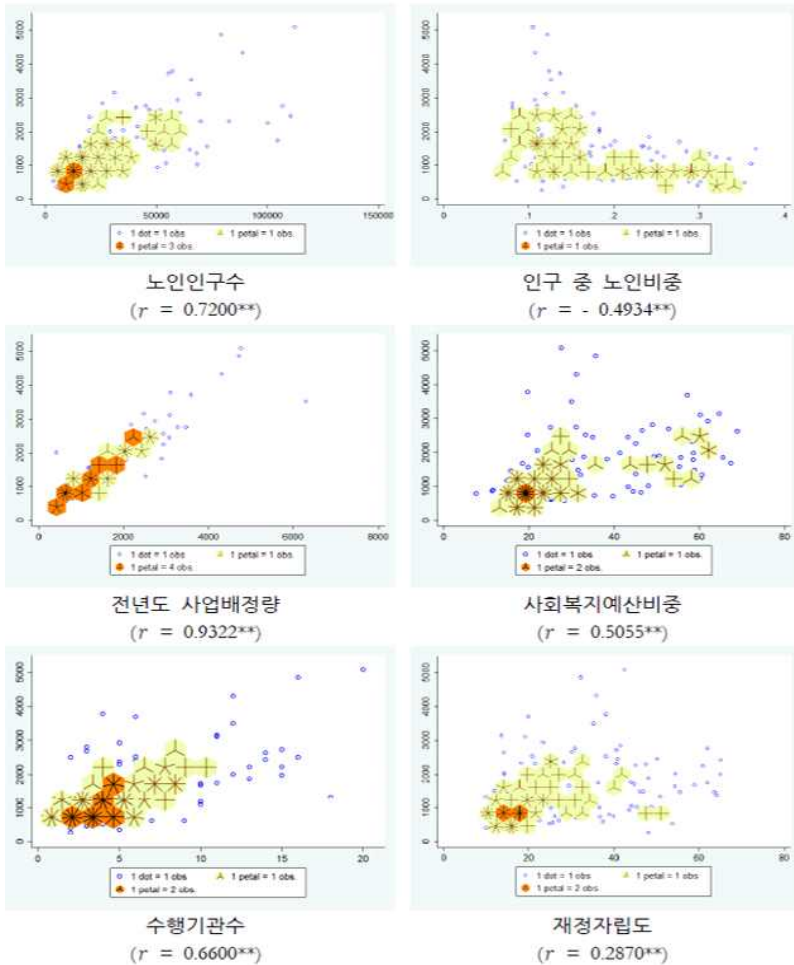
취업알선형	관리사무직, 공공 전문직, 서비스 직, 판매직, 농림어업 작물재배, 기능원 및 관련기능, 생산·제조 및 단순노무직 등	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수행기관 복지부→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복지부→지자체(시·도, 시·군·구)→수행기관
시니어인턴십	편의점 캐셔, 시니어 호텔리어, CGV 도움지기 등	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수행기관(운영기관)→참여기업
고령자친화기업	자동차 용품 제조 및 판매 등	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고령자친화기업

자료 : 김기태 외(2020). 노인일자리 사업 효과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앙중심의 전달체계에 따라, 각 지자체(시도 광역단위 지자체)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전체 예산의 일부를 부담(서울은 30%, 나머지는 50%)를 부담하지만 사실상 중앙과 기초자치단체를 연결하는 매개자로 존재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수행보다는 지역 내 사업총괄, 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등의 기능만을 한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기능을 요구하기 어렵고, 지역 중심의 노인일자리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변금선 외(2019) 연구에서는 중앙중심의 전달체계 한계를 완화하고 지역기반의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방향을 제안함.
  - (협력적 통합모형) 기존의 전달체계 구조를 바꾸지 않고 서비스 참여자 중심으로 서비스 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조정기구를 중심으로 한 모형임.
  - 이 경우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 공급자인 수행기관, 기업이라는 지역 ‘동네’ 단위의 접촉지점을 그대로 두거나, 수행기관 신규진입 장벽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접촉지점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참여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지역사회 자원과 주체로 구성된 지역 노인일자리 생태계에 유기적으로 조응하는 중범위 수준의 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서비스의 연속성, 포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역에 기반한 수요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일자리를 확대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지역중심의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적 수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량 배분이 중요한 핵심 요소로 볼 수 있으나 사업량 배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함.
-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사업량 및 예산 배분 기준 변수는 1) 사업 수요조사(시도별, 사업유형별), 2) 3개년 누적 실적(시도별, 유형별), 3)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60세 이상 인구수(시도별), 4) 전년도 사업량 (시도별, 유형별)임.
-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별 고령인구수 및 기초연금수급자 비중을 기준변수로 사업량을 배분하는 것은 바람직함.
- 다만, 그 외의 기준변수로 전년 또는 과거 3년간 사업실적이 포함되어 있어 과거 사업량 추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한부영 외, 2015; 김우주, 2016; 윤동열 외, 2022),
- 노인일자리사업의 배정량과 관련한 김우주(2016)의 연구에서는 실제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은 전년도 사업물량과 시도별 요구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는 노인인구비율 반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점을 지적함.
- 시군구별 노인일자리사업 배정량과 배정기준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시군구별 실제 배정량은 전년도 사업배정량과 강한 상관성( $r=0.9322$ )을 보였으며, 노인인구수( $r=0.7200$ ),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수행기관수( $r=0.6600$ ), 사회복지예산비중( $r=0.5055$ )도 시도별 노인일자리사업 배정량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시도별 노인비중( $r=-0.4934$ )은 사업 배정량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함. 이는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고령화된 시군구일수록 노인일자리가 적게 배정되었다고 해석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인구 자체가 적거나 지역경제가 낙후되어 사업 확대를 위한 공급측면의 자원이 부족으로 설명될 수 있음(김우주, 2016).

〈그림2-3〉 사업량 기준 변수와 사업배정량 상관관계 분석 결과



\*\*\*  $p < .001$ , \*\*  $p < .01$ , \*  $p < .05$

주 : x축은 당해연도 사업배정량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출자료, 주민등록인구통계(통계청 KOSIS) 및 지방재정통계(행정자치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출처: 김우주. (2016). 노인일자리아업 정책평가. 국회예산처. p.40.

□ 이러한 사업량 배분방식은 광역단위의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배분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요조사와 그 결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 2. 보편성에 기반한 사업운영에 따른 지자체 자율성 부족

- 지역 중심의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운영까지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이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활용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중앙에서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기획과 운영의(예산 자율성 포함)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업운영방식으로 ‘공모형 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음. 이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함.
- 대표적인 공모형 국고보조사업으로는 00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00형 산업단지 그린뉴딜 사업이 있음. 또한, 앞서 살펴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공모형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2-4〉 국고보조사업 대비 공모형 사업 비중



출처 : 홍근석 외 (2021). 공모형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p.55

-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은 보편성에 기반하여 정해진 사업량과 사업유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기획 및 자율적 운영이 어려움.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복지부의 계획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으로 재정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의 재정지원은 국고보조방식으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국비 50%와 광역자치단체 20%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30%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여 사업 추진
- 국고보조사업은 개별 사업항목별로 재정규모가 확정되어 결산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인의 고용역량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주도의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재정경직성을 완화하고 지역별 노인 일자리 수요에 맞는 자율적 계획수립과 집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지역네트워크 협업체계 미흡

- 일자리 창출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사회의 일자리 관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 플랫폼 구축이 요구됨(김수린 외, 2020).
-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은 참여자의 모집에서부터 수요처(수요자, 기업 등) 개발 및 발굴, 참여노인 교육 및 훈련, 일자리 연계, 참여자 관리 등 사업수행 과정 전반을 관장하는 일자리사업의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의 전문성, 연속성 등이 취약하여 긴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업체계 구축이 어려움.
- 노인일자리 수행 인력의 비전문성, 비연속성 등의 한계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노인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내 수행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정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수행과 관련한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

## 24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제 3 장

## 지역중심 중장년 일자리 정책사례

제1절 전북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체계 및 추진현황

제2절 서울시 50+재단 중장년일자리사업 운영체계 및 추진현황

제3절 소결





# 3

## 지역중심 중장년 일자리 정책사례 <<

-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지역 상생형 모델(자자체-기업-시민 등 경제주체간 협력형), 지역 연계형 모델(광역-기초지자체 연계형), 광역형 모델 등 운영방식에 따라 유형이 다양함.
- 본 장에서는 대표적인 지역 연계형 일자리 모델로 전라북도지역 노인일자리 추진사례와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체계와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전북지역에서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지자체 연계를 통해 지역중심의 노인일 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한편,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 50+재단'을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지자체 단위의 일 자리를 체계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음.

### 제1절 전북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체계 및 추진 현황

#### 1. 전북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체계

##### 1) 사업 개요 및 특성

-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는 최소 19.1%에서 최대 22.1%로 전국 노인의 평균 일자리 수요는 17.95%인 반면,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수요는

19.1%~22.1%로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22년 기준 약 3,5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총 6.5만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였으나,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유형이나 사업대상이 대부분 획일적 기준하에서 타시도와 큰 차별성 없이 제공되고 있어 지역성을 발휘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일부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사업의 경우 지역 노인일자리수요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사업도 타시도와 유사한 사업이 많은 것이 현실임.
- 가령,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대체로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 장애인관련 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돌봄이나 보조교사로 수행하는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형의 경우도 식품가공이나 제품포장, 반제품 생산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2) 운영체계 및 주체별 역할

-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사업은 1)행정기관 중심의 정부지원 일자리와 2)전북 노인일자리센터 중심의 민간일자리 사업이 추진됨. 정부지원 일자리는 수행주체는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종합노인복지관 등)임.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총 105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전담인력으로 14개 시군에서 총 457명 그리고 도 1명이 관리하고 있음.
- 수행기관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이 25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19개소, 대한노인회와 시니어클럽이 각각 15개소, 그리고 시군 10개소, 종합사회복지관 9개소 등으로 구성
- 전라북도의 노인일자리 지원체계에서 지역중심의 사업추진은 노인일자리 거점 중간지원조직인 노인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북지역 노인일자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전북 노인일자리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고 시니어클럽이 총 15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노인회의 사회적 일자리지원 사업도 총 15개소의 38명이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표3-1〉 전북지역 노인일자리 운영을 위한 인력구성 현황

구분	인력구성
전체 노인일자리	· 14개 시군 457명(105개소)/도(공무직) 1명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 노인일자리센터 6명 · 시니어클럽 15개소 90명
대한노인회 사회적일자리	· 15개소 38명

□ 법적, 제도적 근거

-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민·관협력망 구축, 노인일자리 DB 구축 및 콜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홍보, 노인취업 교육, 민간형 노인일자리(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사업 추진함.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제7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 ① 도지사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
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관리 기본조례에 준한다.

□ 예산 및 인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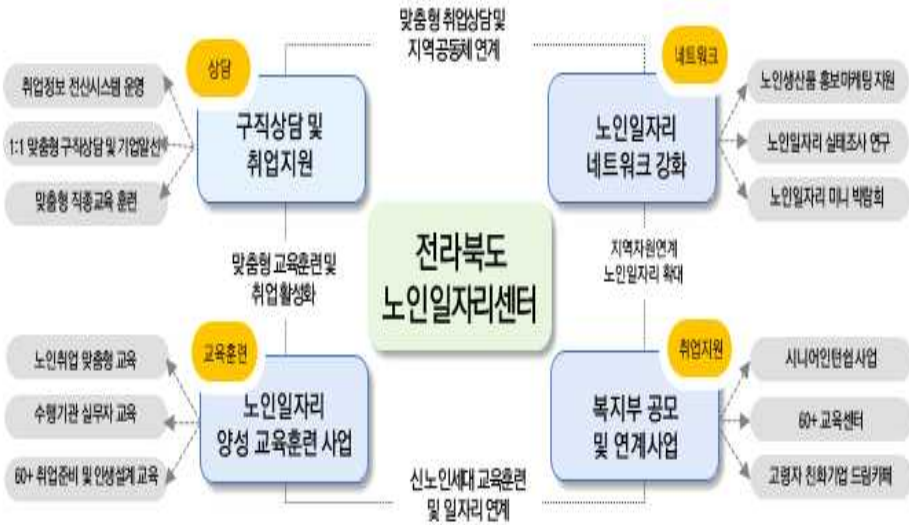
- (인력구성)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는 1실 3팀(전략기획팀, 총무회계팀, 취업교육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직원은 6명으로 구성 운영
- (예산규모)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운영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매년 약 3.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매년 민간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직상담 및 취업지원, 노인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맞춤형 교육사업, 그리고 다양한 복지부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주요 역할 및 기능

- (일자리 개발) 정기적인 지역의 노동시장수요 분석과 수요에 기반한 지역 적합형 일자리 발굴, 관련분야의 상담 및 교육훈련을 지원함
- (구직자 상담) 구직희망노인을 대상으로 구직상담 및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인의 구직의사와 전직경험에 기반한 교육훈련 그리고 지역산업기관과 연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노인의 취업알선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지역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활동을 통해서 취업정보를 DB화하고 전직 경험과 직장경력 등을 중심으로 심층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함.

- 구직상담은 크게 ① 취업정보 전산시스템 구축 및 구직등록자 D/B 확보, ② 1:1 맞춤형 상담 및 희망 직종 기업체 알선, ③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 작성 코칭, ④ 맞춤형 직종 교육, ⑤ 취업 알선 시 동행면접 서비스 제공 및 취업성공자 사후관리 진행함.

〈그림 3-1〉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주요사업 현황



- 또한, 복지부 공모사업을 토대로 신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노인일자리창출사업으로 드림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음.

〈표3-2〉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주요사업 현황

구분	주요내용
구직상담 및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정보 전산시스템 구축 및 구직등록자 D/B 확보</li> <li>· 1:1 맞춤 상담 및 희망 직종 기업체 알선</li> <li>·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 &amp; 자기소개서 등 작성 코칭</li> <li>· 맞춤형 직종 교육 실시</li> <li>· 취업알선 시 동행면접 서비스 제공 및 취업성공자 사후관리</li> </ul>
노인일자리 민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 민관 협력망 구축</li> <li>·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컨설팅 및 통합메뉴얼 제작보급</li> <li>· 노인일자리 DB구축 및 콜센터, 노인 생산품 홍보지원</li> <li>· 노인일자리 정책연구 및 포럼</li> <li>· 노인일자리 종사자 힐링데이, 노인일자리 홍보사업</li> </ul>
노인일자리 양성 및 맞춤형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취업준비 및 60+인생설계교육</li> <li>· 노인일자리 실무자 역량교육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직무역량 교육</li> <li>· 온라인 교육영상 제작지원</li> </ul>

구분	주요내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니어인턴십 (복지부 공모사업)</li> <li>· 고령자친화기업(드림카페)</li> <li>· 은퇴자작업공간 피노키오제작소 (전라북도 공모사업)</li> </ul>

자료 :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2022) 내부자료

## 2. 전북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예산현황) 2022년 한해에만 약 2,52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총 6.5만개의 노인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이 중, 노인일자리센터의 운영예산은 2014년 약 1.5억원에서 2021년 3.4억원으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함.

〈표3-3〉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비 현황

단위사업	예 산 액 (단위: 천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사군	
합 계	343,239		343,239		
① 노인일자리센터 운영지원*	290,239		290,239		도비 100%
②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	40,000		40,000		"
③ 노인일자리 양성 및 맞춤형 교육	13,000		13,000		"

자료 : 전라북도(2022) 내부자료

### 1) 직업교육 추진현황

#### □ 직업훈련 교육

-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은 크게 역량개발과정과 취업지원과정으로 운영중에 있고, 역량개발과정은 양성과정과 자격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 양성과정은 스마트라이프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시니어 전문강사 양성과정, 베이비시터 양성과정, 목공체험 지도자 양성과정 등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격과정은 자원봉사 관리자 자격과정과 시니어 트레이너 자격과정 그리고 바리스타와 코딩 자격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함.

- 직업훈련과정의 경우 2021년 한해에만 목표교육자 수는 180명이었고 이중 약 18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43명이 최종 취업과 연계되었음. 직업 훈련과정에서 취업으로 연계된 교육과정은 스마트라이프 코디네이터 양성 과정과 전문경력자 역량개발 교육과정임.

〈표3-4〉 2021년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직업교육현황 및 취업연계 성과

구분		과정명(과정당 횟수/총시간)	목표	교육인원	취업연계 인원	
		합계	310명	317명	176명	
역량 개발 (9개)	양성 과정	스마트라이프 코디네이터 양성과정(1회/9시간)	180명	13명	13명	
		시니어 전문가사 양성과정(3회/27시간)		53명	-	
		베이비시터 양성과정(1회/9시간)		-	-	
		우드팜 목공체험 지도자 양성과정(1회/15시간)		10명	-	
				전문경력자 역량개발 교육(1회/3시간)	30명	30명
	자격 과정	자원봉사관리사 자격과정(1회/6시간)		13명	-	
		시니어 트레이너 자격과정(1회/6시간)		10명	-	
		바리스타 자격과정(3회/36시간)		45명	-	
		코딩지도사 자격과정(1회/12시간)		10명	-	
취업지원 (3개)	지역맞춤 전문인력(5회/10시간)	130명	53명	53명		
	행정보조실무자 양성과정(2회/6시간)		50명	50명		
	시니어 가사·간병지도사(1회/12시간)		30명	30명		

- 또한 역량개발과정과 함께 취업지원과정을 운영중에 있는데 취업지원과정은 지역맞춤 전문인력 과정, 행정보조 실무자 양성과정, 그리고 시니어 가사 간병지도사 과정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함. 취업지원과정은 총 130명 교육대상 목표에 2021년 한해 약 133명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전체 교육

과정 이수함.

- 신노인세대(베이비부머) 전직경험을 활용한 노후지원교육 및 노인일자리 관계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 전라북도에서는 잠재적인 노인취업자만이 아닌 현재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와 수행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임.
  - 전라북도는 2021년 말 기준 6.5만명의 노인이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고 수행기관만 105개소에 이르고 수행기관 담당자(전담인력)은 457명이 참여하고 있어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전담인력의 직무역량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전라북도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와 노인일자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직무역량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음.

〈표3-5〉 2021년 전라북도 베이비붐세대 및 노인일자리 관계자 교육과정 운영

사업명	내 용
60+ 취업준비교육	· 민간영역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직활동, 이력서작성, 면접방법, 취업전 마음가짐 등의 교육제공
60+ 인생설계교육	· 60세 이상 도민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일자리, 여가, 건강, 대인관계 등의 종합적 정보 제공
노인일자리참여자 직무역량교육	· 도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과 관련한 직무역량 교육
노인일자리 실무자 교육	· 도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재무회계, 기획, 마케팅 분야 전문 강사를 초빙 역량강화
온라인교육영상 제작지원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중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시인프라 구축에 열악한 기관을 대상으로 공간·장비·기술 제공

- 노인일자리 참여자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지역의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



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 4회에서 6회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실무자교육은 수행기관의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나 재무관리, 기획이나 마케팅 등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외에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중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공간과 장비 및 기술을 대여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2021년 말 기준 전북 60플러스 교육센터에서는 노인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을 위해 총 12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총 317명이 교육을 수료함.

## 2) 일자리 유형별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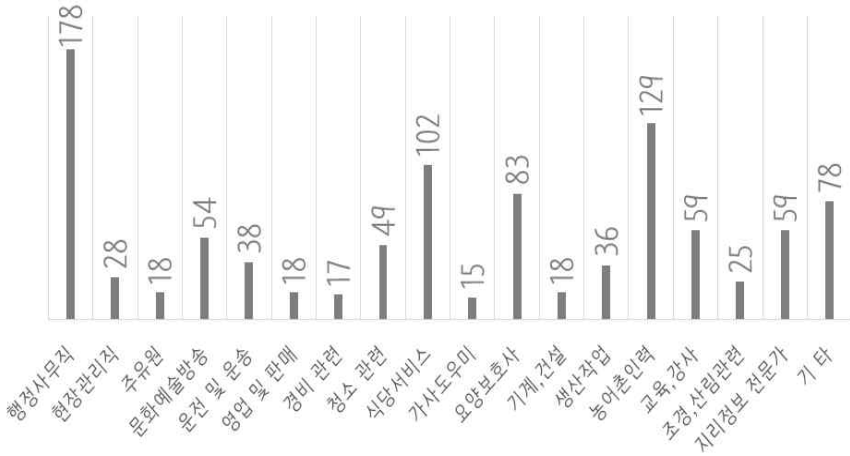
### □ 시장형사업단 추진현황

- 시장형사업의 식품제조는 영농분야가 다수 차지하고 있고 반찬이나 참기름, 두부, 만두, 송편, 과자 등의 식품제조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도시권 식품제조 품목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음.
- 식품제조 및 판매분야에서는 나름 지역성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생산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데, 경북은 과일청과 과일잼, 부산은 어묵, 충북과 전남은 김치, 강원도는 수제초콜릿 그리고 전북은 장류 등이 대표적임.

### □ 취업형 일자리 추진현황

- 2021년 기준 지역 노인 대상 구직등록 및 취업상담 건수는 2,101명이고 이는 전년도 1,813명보다도 소폭 증가하였고, 상담과 훈련을 통한 취업지원실적은 2021년 약 1,004명정도로 매년 1천여명 이상을 지역사업체로 취업시키고 있음.

〈그림3-2〉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직종별 현황



□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현황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경제적 조직 활용 베이붐 세대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에서는 고용노동부 및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관내 만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추진
-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업계획서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선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노인일자리센터와 함께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 추진
- 지역내 사회적 기업, 예비적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소정의 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하여 사회참여 활성화
- 전라북도는 관내 거주자로서 만50세에서 70세 미만의 퇴직자 중 해당분야에서 경력 이 3년 이상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월 최대 120시간 이내 사회참여활동 수행 지원
- 전라북도에서는 순창군에서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차량동승 도우미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순창군의 지역아동센터 4개지역에 신중년을 배치하여 아동의 등하원 차량 동승  
과 아동의 안전한 승하차 지원

〈표3-6〉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사업명	내 용	참여기관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실비 : 1일 4시간 이상 9천원 (식비 6천원, 교통비 3천원)</li> <li>* 1일 4시간 미만 3천원(교통비)</li> <li>· 참여수당 : 1시간당 2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li> <li>· 비영리법인·단체</li> <li>· 행정기관, 공공기관</li> <li>· 사회적협동조합 등</li> </ul>
활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자 1인당 기본 활동시간</li> <li>* 월 최대 120시간 이내</li> <li>* 연간 1인당 연간 기본 480시간 이내</li> <li>· 격일제, 시간선택제 등 적극 활용 가능</li> </ul>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거주자</li> <li>·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 전문인력</li> <li>·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퇴직자</li> <li>·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는 3년 이상 경력과 동일</li> </ul>	

- 한편, 전라북도 신중년의 사회참여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순수 도비사업으로 은퇴자 작업공방 사업도 추진중에 있음.
- 전라북도는 베이비붐세대의 증가로 인한 신중년의 사회참여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군공모를 통해 2018년부터 은퇴자 작업공방 설치 운영
- 은퇴자 작업공방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은퇴자의 지역공동체 작업공간을 설치운영하고 소정교육을 수료한 노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으로 봉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 은퇴자 작업공방은 2018년 남원시를 시작으로 익산시, 전라북도, 고창군, 그리고 김제시 등 총 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음
- 노인공방은 베이비부머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일정한 기술을 가진 수료생을 중심으로 집수리, 어린이집 공방강사 등을 통한 지역자원의 연계로 신중년의 사회참여 활성화 견인

〈표3-7〉 노인 작업공방 설치 운영 현황

구분	수행기관	작업장명 (사업비)	주요실적 및 계획
'18년 (남원시)	(사)한생명	목금토공방	목공기초 : 37(40명) 용접기초 : 27(30명) 월별사업 : 20명×5월 자율목공 : 20명
'18년 (익산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청춘놀이터 목공방 (500백만원)	목공기초 : 47(60명) 목공 DIY : 27(30명) 목공체험 : 47(60명)
'19년 (전라북도)	전북 노인 일자리센터	피노키오 제작소 (200백만원)	목공 DIY : 12회(10명) 전문가 양성 : 4회(6명)
'20년 (고창군)	고창군 (전북대 한옥건축 기술양성사업단)	소나무 청춘공방	목 공 : 18회(20명) 서 각 : 15회(20명) 제품제작 : 12회(20명)
'21년 (남원시)	남원시 (직영 또는 위탁)	햄파우 실버 wood 작업장	목공예, 가구제작, 목공자격증 취득과정 등
'22년 (김제시)	김제시 (직영 또는 위탁)	희망제작소 [나무와 숲]	목공방, 목공 DIY교실, 생활공예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과정 등

### 3) 지역 네트워크 추진 현황

- 전라북도 민관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주로 구직상담과 직종교육을 통해 고용역량이 갖추어진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의 민간사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민관 협력망 구축과 노인일자리 DB구축 및 콜센터 운영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임
- 노인일자리 민관네트워크를 통해서 노인일자리 수요가 있는 민간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2021년에는 약 755개의 민간구인업체를 발굴함
- 특히, 지역의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 민간사업체 대상 실태조사와 노인 직업 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등 매년 노인일자리 관련 조사와 포럼을 실시하여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공감대 강화 추진

- 또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고용역량강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함께 노인일자리 참여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컨설팅 등의 사업 추진
- 이외에도 노인생산품의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를 위해 도내 생산품에 대한 홍보영상제작 및 디지털 카달로그 제작을 지원
- 상시적인 노인일자리 관련 구인구직 정보공유를 위해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어플을 제작하여 일자리 관련 정보제공과 함께 각종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정보 제공 및 온라인 교육신청 서비스 제공

〈표3-8〉 전라북도 민관 노인일자리 네트워크 주요사업 현황

단위사업	목표	실적	세부 추진내용
노인일자리 민·관 협력망 구축	6회	4회	· 내용 : 노인일자리사업 협의체 구성 및 실무위원회 운영, 간담회 추진 · 대상 : 노인일자리 담당기관 대표 및 실무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지원	컨설팅 10곳	-	· 내용 : 수행기관 운영 컨설팅(평가, 시스템, 행정 등) · 대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메뉴얼 1회	매뉴얼 제작 1회	· 내용 :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통합 매뉴얼 제작·보급 · 대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DB구축 및 콜센터	콜센터 1회	민간구인업체 발굴 (755개)	· 내용 : 노인일자리 통합 콜센터 운영 및 지원 · 대상 :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구인구직 통합상담
	DB구축 1회	2회	· 내용 : 도내 노인일자리 구인구직정보 DB 구축운영 · 대상 : 도내 민간기업체 및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 실적 : 도내 민간기업체 DB구축(도내 총 업체수 6,120개)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DB구축(홈페이지내)
	실태조사 1회	1회	· 내용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 · 대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 실적 : 수행기관 105곳 실태조사(수행기관, 배분량 등)
노인 생산품 홍보지원사업	영상 및 카달로그 4건	홍보영상 5회 디지털카달로그 2회	· 내용 : 도 내 노인생산품 홍보영상 및 디지털 카달로그 제작, 판매 이벤트 진행을 통한 홍보 지원 · 대상 : 고령자친화기업 및 시장형사업단

40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단위사업	목표	실적	세부 추진내용
노인일자리 정책연구 및 포럼	연구 및 포럼 1회	1회	· 내용 : 현안 과제 및 단기정책 연구 및 포럼 · 주제 : 전라북도 노인교육훈련센터 설치·운영(안) · 실적 : 전문가 간담회 및 포럼 1회
노인일자리 종사자 힐링데이	힐링데이 1회	-	· 내용 : 노인일자리 종사자 문화활동지원 · 대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실무자
노인일자리 홍보사업	이동상담 등 12회	· 어플리케이션 및 홈페이지 상시운영 · 이동상담 : 9회	· 내용 : 노인일자리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찾아가는 이동상담 운영, · 실적 : 홈페이지 구인정보 등록 : 총 656건
	E소식지 4회	2회 (1,567개소)	· 내용 :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E-소식지발간(뉴스레터) · 대상 : 도내 노인일자리 유관기관 및 수행기관 · 실적 : E소식지 1회 626곳, 2회 941곳)
	서포터즈 20회	14회	· 내용 : 노인일자리서포터즈 구성 및 SNS 운영 · 대상 : 도내 일자리 서포터즈 참여 희망 대학생, 도민 등 · 실적 : 일자리 서포터즈 7명, 14회

자료 :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2022) 내부자료

〈그림3-3〉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 어플



- 채용중인 구인정보 제공**
  - 전라북도에서채용중인 구인정보제공
  - 워크넷에서채용중인 구인정보제공
- 취업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접수**
  - 현재 운영중인 취업교육 정보제공
  - 취업교육 일정 및 계획 제공
  - 취업교육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취업교육 환류 및 피드백
- 시니어채용 지원사업 안내**
  - 시니어인턴십사업 안내(대상, 지원내용 등)
  -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정보 공유
- 전북 노인일자리센터 사업안내**
  - 전북 노인일자리센터 주요사업 안내
  - 노인관련 교육 및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
  -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동향 등 종합정보 제공

-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례 민관학 연계 조사연구사업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 노인일자리센터에서는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조사연구사업을 추진
  - 전라북도의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민간분야의 노인 취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모색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영역의 사업체에서 노인고용 욕구에 대한 조사와 함께 희망하는 노인인력 고용 분야에 대한 정확한 수요파악 필요
  - 이를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노인일자리센터 그리고 지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노인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의 규모와 노인고용 희망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대상 직업상담과 취업연계 추진
  - 2014년 지역소재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인인력에 대한 고용의사와 고용분야 등을 조사하여 향후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사업과제 도출
  -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민간분야의 노인고용분야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조사결과에 대한 공개세미나를 통해 민간분야 노인취업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론장 마련

〈표3-9〉 민·관·학 연계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구분	연구조사
2013년	민간기업연계 일자리개발을 중심으로
2014년	전북 민간사업장 고령 인력 고용실태 인식 연구
2015년	전북 민간사업장 노인인력 활용 현황과 관련 요인
2016년	전북 베이비부머 정책 수요조사 및 일자리 정책 방향
2017년	전북형 신규 노인일자리 영역발굴 및 활성화 방안
2018년	통합형 노인 일자리센터 활성화 방안
2019년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실태조사 및 연구조사
2020년	민간 영역의 노인일자리 고용활성화 방안
2021년	민간 영역의 노인일자리 고용활성화 방안

## 제2절 서울시 50+재단 중장년일자리사업 운영체계 및 추진현황

### 1. 서울시 50+재단 중장년일자리사업 운영체계

#### 1) 사업 개요 및 특성

- (법적근거) 서울시 중장년 정책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중장년층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50플러스재단에서 추진하는 중장년 일자리사업도 동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 운영됨.
- (사업내용) 서울시 50+정책은 『서울시 50+지원 종합계획(2016)』 수립에 따라 2016년부터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여 중장년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일·활동 연계의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함.
  -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함.
- 일자리 관련 사업으로는 사회공헌일자리, 경력전환 및 취업, 창업, 창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일·활동 연계율이 55% 이상으로 높은 수준).
  - 중장년층(만45~67세)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파트타임형(월 57시간), 풀타임형(주5일 전일근무)으로 구분되며, 활동처는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민간기업, 법인, 협회, 단체임. 50+세대들은 재무, 회계, 마케팅, 홍보, 인사, 노무 등 전문영역 업무 및 사업을 지원함.



〈표3-10〉 서울시 50+재단 상담, 교육, 일자리 연계 주요 사업

사업영역	주요 내용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상담</li> <li>- 컨설턴트 상담</li> <li>- 전문기관 연계 상담</li> <li>- 생애설 상담소 운영</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이해</li> <li>· 신진로 개발 및 역량개발</li> <li>· 사회참여</li> </ul> </li> <li>· 당사자 및 시민 제안 교육과정 운영</li> <li>· PT데이, N개의 교실</li> <li>· (50+센터) 50+열린학교, 자유학교 운영</li> </ul>
자원봉사, 사회공헌활동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플러스 지원사업 운영</li> </ul> </li> <li>- 사회공헌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자원봉사단,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li> </ul> </li> </ul>
일자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공헌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50+보람일자리사업</li> </ul> </li> <li>- 경력전환 및 취업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앙코르전직지원</li> <li>· 서울50+인턴십</li> <li>· 50+적합일자리, 굿잡 5060</li> </ul> </li> <li>- 창업, 창직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큐베이팅 지원프로그램</li> <li>· 점프업 5060</li> <li>· 공유사무실 (공간대여)</li> <li>· 50+단체 지원사업</li> </ul> </li> </ul>

자료 : 강소량 외(2021). 서울시50플러스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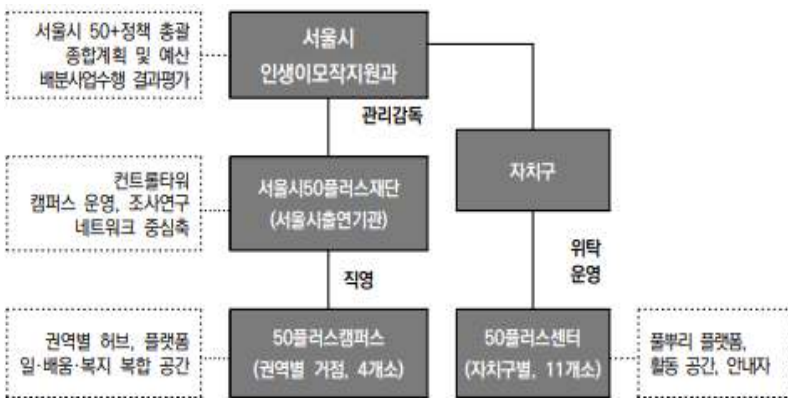
## 2) 운영체계 및 주체별 역할

□ (운영주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중심으로 권역별 50플러스캠퍼스와 자치구별 50플러스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체계임.

○ (서울시50플러스 재단) 재단법인 성격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서울시 출연금 100%로 운영되며, 50+ 정책 및 사업 컨트롤 타워로 정책수립, 사업기획의 역할을 담당함.

- (50플러스 캠퍼스)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직속 조직으로서 재단이 직접 운영함. 서울시 권역별 허브, 50+ 정책 플랫폼, 일/배움 복합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함. 50+종합상담, 50+전환교육, 50+당사자활동지원, 50+일자리사업을 운영 수행하는 수행기관임.
  - (50플러스센터) 자치구별로 설치하여 민간 위탁 운영함. 서울시 자치구 지역기반 플랫폼, 지역사회에서의 활동공간을 제공함. 인생설계사업(상담, 교육사업), 일/활동 사업, 당사자지원사업(커뮤니티사업, 당사자기확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임.
  - 2021년 기준, 권역별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4개소(서부, 중부, 남부, 북부), 자치구별 50플러스센터 9개소(도심권, 동작, 영등포, 노원, 서대문, 성북, 금천, 강서, 서초)가 설립·운영 중임.
- 50플러스 재단, 캠퍼스, 센터 외에도 사업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 및 자치구 등의 행정, 시민사회영역, 기업 등 시장영역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내 일자리 창출, 연계하고 있음.

〈그림3-4〉 50+재단 운영주체별 역할 및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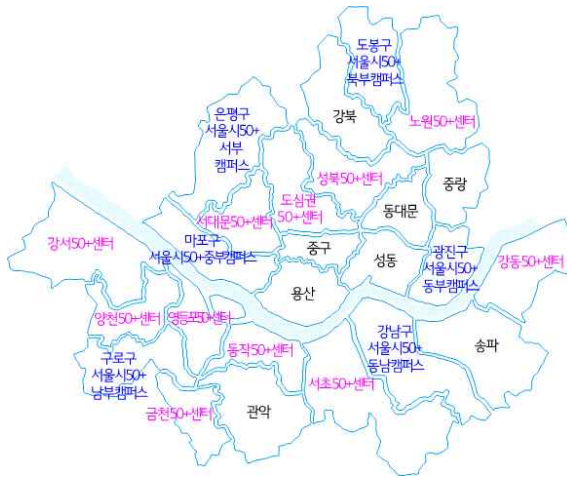


출처 : 강소랑 외(2021). 서울시50플러스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2. 서울시 50+재단 중장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

- '22년 현재 서울시 50+재단을 중심으로 권역별 거점 기관인 '50+캠퍼스' 4개소, 자치구별 거점기관인 '50+센터' 11개소가 설립되었음.

〈그림3-5〉 서울시내 50+캠퍼스 및 센터 설치 현황



출처 : 강소랑 외. (2021). 서울시50플러스센터 지원체계 구축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각 운영기관별로 역할과 기능이 다소 상이하므로, 사업 영역별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봄.
- 50+캠퍼스와 50플러스센터는 인적, 물적 운영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상담, 교육, 커뮤니티, 일자리(자원봉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 영역별 추진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50+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상담사업은 동년배 상담형식으로 운영되는데 상대적으로 50+캠퍼스 실적이 높게 나타남.
- 교육의 경우, 당사자가 제안하는 형태의 교육과정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50+ 센터의 교육추진 실적이 높게 나타남.

- 일자리 (50+캠퍼스의 경우 자원봉사)사업은 기관별로 운영상 차이가 존재함. 50+캠퍼스는 일자리사업을 아예 확대하여 규모 있는 프로젝트 단위 사업(서울50+인턴십, 점프업5060, 굿잡5060 등)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50+센터는 교육과정 이후 50+세대가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사회참여를 할 수 있게 사후활동으로 커뮤니티 및 단체 연계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됨.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은 상대적으로 50+센터가 높은 수준임.

### 제3절 소결

- 이상에서 살펴본 전북지역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사례와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사업 운영사례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연계하여 지역단위의 일자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1) 광역단위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2) 지역 내 수요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 운영하기 위한 종합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사함.
- 시도 광역단위의 제도적 근거
  - 서울시 중장년 정책은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중장년층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함. 전북지역에서도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조례’에 근거하여 민·관협력망 구축, 노인일자리 DB 구축 및 콜센터 운영,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원, 홍보, 노인취업 교육, 민간형 노인일자리(시니어인턴십, 취업알선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시도 광역단위에서 조례 등을 통한 공식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운영의 지속성,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음.

-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개발, 운영을 위한 종합적 역할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 조직
-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노인일자리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수행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이면서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전북권역내 14개 시군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간담회를 포함하여 지역 적합형 노인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고용우수기업 협약과 고령친화 선도업체에 대한 벤치마킹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개발, 운영 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
  - 서울시 50+재단에서도 광역단위에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관련 수요 를 토대로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군 단 위의 자치구 행정, 시민사회영역, 기업 등 시장영역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내 일자리 창출, 연계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 당하고 있음.



# 제 4 장

##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운영실태 및 쟁점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사업 필요성 및 충분성 인식

제3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

제4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운영주체별 역할 및 기능

제5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통합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확장 가능성





# 4

##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운영실태 << 및 쟁점

### 제1절 조사개요

- 본 장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역중심 노인 일자리 양적, 질적 확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FGI를 수행함.
- FGI조사를 통해 지역중심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을 위한 운영체계 상 한계점과 개선점을 도출함.

〈표4-1〉 FGI 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방법	노인복지 분야 전문 모더레이터에 의한 FGI
조사대상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장 전문가 (12명) - 농어촌지역 수행기관 담당자 3명 - 도농복합지역 수행기관 담당자 3명 - 도시지역 수행기관 담당자 3명 - 지자체 수행기관 담당자 3명
조사일시	2022년 11월 7일 13:00 ~ 15:00 / 16:00 ~ 18:00 2022년 11월 9일 16:00 ~ 18:00 2022년 11월 11일 10:00 ~ 12:00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노지역중심 일자리 개발 필요성 및 충분성 인식</li><li>•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양적, 질적 확충을 위한 운영상 한계</li><li>•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운영주체별 기대하는 역할, 기능 등</li></ul>

□ FGI 참여자의 소속기관의 종류 및 기관의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4-2〉 FGI 참여자 정보

그룹	지역	소속기관 유형	직위	구분
1그룹 (농촌)	경기도 이천시	종합복지관	관장	농촌a
	충북 옥천군	시니어클럽	관장	농촌b
	전남 곡성군	시니어클럽	관장	농촌c
2그룹 (도농복합)	강원도 춘천시	대한노인회	센터장	도농a
	경기도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도농b
	전북 전주시	일지리지원센터	관장	도농c
3그룹 (도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일지리지원센터	팀장	도시a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회적기업	팀장	도시b
	경기도 의왕시	시니어클럽	과장	도시c
4그룹 (지자체)	경기도	일지리지원센터	팀장	지자체a
	충남	도청	공무원	지자체b
	서울시	증장년 일자리 관련 재단	연구원	지자체c

## 제2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사업 필요성 및 충분성 인식

- 대부분의 참여자가 지역중심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지역별 특성이 다르고 노인특성이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노인이 각 지역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노인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함.

### 인터뷰 결과

“네 당연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별로 워낙 환경이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능력이 있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지자체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확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이든 환경적인 부분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특수성을 좀 많이 반영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도시 그룹 a)(농촌그룹 a,b,c)

지역적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개발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도농복합그룹 a,b,c).

특히, 노인특성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노인특성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특성이라는 것이 결국 노인일자리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도농복합그룹 b).

경기도만의 독특한 사업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경기도형이라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사실은 좀 많이 제한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제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일자리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인 비율도 지역별로 다 틀리고, 그다음에 재정 자립도도 틀리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접경 지역도 있고, 해안 지역도 있고, 문화재들이 또 많은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 일자리들을 발굴을 해서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지자체 b).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업 일자리가 생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은평구에서 근무하는데, 공장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이제 주거단지다 보니까 지역 특수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는 거에 사실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도시그룹 c)

- 지역중심 노인일자리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개발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인터뷰 결과**

지역중심 노인일자리기개발 매우 중요함. 그러나 개발 되고 있지 않음(농촌 a,b,c)(공통의견).

... 지자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으로 필요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혹은 시청 내에 관련 부서에 또 문을 두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찾아낸 그 노인 일자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아무도 접근을 하지 않고 계신 상황이셨어요. (도시그룹 b)

지역 중심의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 지자체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복지 사업의 예산 중에 한 70~80%가 노인복지 사업 예산으로 투자할 만큼 그렇게 시에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으시고요. .... 저희구가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가 굉장히 호의적이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관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수행 기관이 이제 구획을 나눈 거에 대해서 자율성이라든지 의견 수렴을 충분히 지자체가 해줬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도시그룹 a)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일자리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제 충분히 개발 연계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인력개발원, 노인 인력개발원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공무원 워크숍을 할 때 본원에서 오셔서가지고 여러 가지 연계 사업들, 아이터మ్들을 쪽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업들 아이터మ్은 다 좋은데 그러면 이것을 아이터మ్별로 해서 이제 제공을 하면 수행 계획에서 할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지자체 b)

- 한편으로는, 지역적 특성이 있는 지역은 지역중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규모 농어촌지역은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개발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기 무조건적인 확대에 대한 우려도 확인됨.

### 인터뷰 결과

저는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지 지역 특색이 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 자치단체나 광역마다 아니면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또 일자리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니까 저는 지역적 특성이 조금 반영돼서 지역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지역 중심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중앙에서 일자리 같은 것들을 좀 창출해서 내려보내 줄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가야 되야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자체 그룹 a)

귀농, 귀촌 같은 것도 저희도 시도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촌 지역과 연계를 해서 그런 일자리를 한번 또 우리가 만들어보자 했었는데 이것도 도시 사시는 분들은 좀 많이 좀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모델을 서울 쪽으로 좀 응용을 해서 도시형 농장이라든가 도시형 스마트팜이라던가 이런 걸로 오히려 응용을 해서 쓰시지 좀 그 지역에 내려가서 하시는 이런 것들은 좀 선호하지 않으셨고. 또 반대로 경북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를 서울로 갖고 와서 적용을 한대라고 하면 이에 대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도 좀 일자리 개발하는 데 좀 호불호가 좀 있던,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지자체 그룹 a)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개발하는 거에는 굉장히 좀 한계점이 많고. 반대로 또 정부나 국가에서 만들어 주시는 이런 재정지원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거는 호불호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공급해 주시는 재정 지원 일자리 같은 경우는 기간이 너무 한정적이고 또 이제 일자리 개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줄 수 있는 급여가 너무 적고 좀 이렇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건 정부에서 해주는 거니까 내가 쉽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접근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용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는 거죠.(지자체 그룹 a)

### 제3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

#### 1. 지역단위의 사업 추진 근거 및 기반 조성

- 지자체 그룹과 도농복합 그룹과 같은 지역규모가 큰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침상 기준, 지역단위의 조례 지정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남.
-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법적 근거가 여전히 미흡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공공성, 공익성이 부족하여 일자리 발굴 및 매칭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 인터뷰 결과

“ ... 지방 일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나 아니면 제가 속한 자치단체 내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어떤 지침, 이 지침보다 더 나가서 사실은 저는 조례라도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수행기관에서 일자리 개발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촌c)

“조례지정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기관으로 대한노인회가 지정되어서 민간일자리 개발하고 연계하는데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도농복합 c)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침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지침만으로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서 일자리를 진행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최소한 지역자율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산에 대한 범위,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도농복합 a)

“지역 단위에서 조례를 지정해주면, 지역내 민간기업이나 기관 컨택하기도 수월하고, 일자리 개발이 좀 더 수월할 거예요.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농촌 a).

## 2. 지역 중심의 사업운영 자율성 확보

- 지역내 노인일자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자율성과 책임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보조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통적으로 확인됨.

### 인터뷰 결과

“충분한 예산 확보죠. 사실 예산만 많이 마련되면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양과 질을 동시에 가져가기는 정말 너무 어렵고요. 그런데 중장년들도 이런 고민이 많은데 노인층은 더 할 것 같거든요. 진짜 일을 너무 하고 싶으시고 뭐라도 용돈 벌이라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런 수요를 맞춰드리려면 일단 양적인 것부터라도 다양하게 채워드려야 한다는 거죠.”(도농복합b)

“행안부에서 이렇게 딱 주고 예산이 얼마데 너 한번 이거 계획서 써 내봐. 해서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써가지고 중장년 일자리 따냈던 것들을 제가 기사나 이런 것들로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모 형식으로 큰 테마를 주고 지역 기반 노인 일자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굴하려고 한다. 각 지역에서는 어떤 거 할 수 있을지 한번 공모에서 내보세요라고 한다면 사실 지역 입장에서도 비슷한 고민하고 있거든요. 노인들 너무 많고 일자리 많이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지자체b)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는 사회서비스형으로 참여자만 들어오시면 되는 상황이었고 이 참여자들은 능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을 저희가 채용을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서 활동만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명단 제출을 저희가 일단은 요청을 드려야지 이 노인 일자리 사업도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pt까지 진행을 했을 때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일정 기관의 일감을 몰아주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셨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임의로 그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웠어요.. (도시c)

- 이러한 예산의 자율성과 더불어 도시 그룹과 광역단위 지자체 그룹에서는 사업기획 및 실행,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 역량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형 사업을 통한 기획,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인터뷰 결과

해마다 진행되는 신규 아이템 공모전들을 저희도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게 고착화돼서 계속 이어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단일성 사업으로 올해 한 번 해봤다가 이게 크게 실적이 안 나오면 확대되지 않고 그대로 묻히는 경우들도 저희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가 축소된다고는 하나 질적인 부분까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도농복합 a).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서 지역 중심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지역 중심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중앙에서 일자리 같은 것들을 창출해서 내려 보내 줄 수 있는 그런 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a)

### 3.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확대

- 이번 조사에서 농촌그룹과 도농복합 그룹의 경우에는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업,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도시나 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또한 제도상에는 지역협의체 및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갖추어져 있으나, 여타 지역복지사업이나 지역일자리 사업과 비교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지역거버넌스가 약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함을 확인함.



### 인터뷰 결과

“제도적으로 네트워크 체계는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전담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회의가 지속될 수도 없고 체계성 가질 수도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읍면동 단위의 수행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네트워크업무를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기관에 지자체 예산을 좀 더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농촌 a)

“일단 지역적 특성이 다 틀리고요. 또 수도권 틀리고 지방 틀리고 또 도농 복합형 틀리고 농촌형 틀리고 다 틀린데 이거에 맞춤형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보급할 건지 그래서 지역의 전문가들이나 지역의 거버넌스 이런 얘기를 같이 하는데 우리 노인은 하나의 섬처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그런 어떤 고용노동부나 또 새일센터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고용 전문기관들과 어울림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도농복합 c)”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정부 부처 사업을 통해서 관내 유관기관과 많은 인프라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틈새를 파고들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했던 과정 중에 하나는 전국 단위 사업으로 이거를 가져가고 싶어서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그 안에 독거노인이나 만성 질환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었습니다.(도시c)”

□ 특히, 민간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조직,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부재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개발, 연계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함.

□ 더불어, 지역내 협의체 및 거버넌스 운영 상 체계성, 연속성을 위해서는 개발원 각 지역본부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남.

## 인터뷰 결과

“개발원이나 지역 본부와 연계성 필요성 이런 노력 같은 경우는 개발원 측에서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장점은 강점으로 부각을 시키고 단점 같은 경우는 보완해서 일자리 개발에 대한 개선을 위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도농복합 a)”

“..민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본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역본부가 만들어진 이유도 사실 그 지역에 맞는 소통 창구로 활용 하기 위한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역 본부에서 민간 일자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좀 더 세부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농어촌 c)”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수행하고 보니까 노인 일자리나 사업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국가 중앙 정부나 노인력개발원에 부탁 이거 전문성을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수행 담당 기관별로 아까 말씀하신 프랜차이즈 쪽에 또 능통하신 기관이 있고 저희처럼 민간 기업체에 거기에도 또 몰두를 하는 기관들이 있고 그래서 거의 노인 일자리 분야도 각 기관별로 최대한의 전문성을 구분을 해서 사업을 맡겨주셨으면 오히려 저희 일하는 직원들이나 저희들이나 또 전문적으로 또 뛰고 그쪽으로 발걸음 하고 그런 쪽으로 연구가 돼서 더 좋은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도농복합 c)”

## 제4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운영주체별 역할, 기능

### 1.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역할, 기능

- 지역주도성(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기반 조성
  - 앞서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도출된 의견과 연결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기획,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먼저 정비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함.
  - 사업량 배분 및 예산 활용에 있어서 지역의 수요와 여건이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남.

#### 인터뷰 결과

“.. 조금 너무 경직적인 예산 운영 지침이에요. 예를 들면, 10만 개의 10%로 예를 들어서 10%는 자율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1~2억은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여지를 준다면 책임감 때문에도 사업 개발할 거예요...자율권이라는 것은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든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치단체가 하나씩 개발하게 돼 있어요.(농촌b)”

- 노동 및 고용 관련 법적, 정책적 변화에 대응기반 마련
  - 최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제도적, 법적 변화에 대응하여 참여노인의 건강이나 안전재해 발생에 대한 위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시니어 인턴십 등과 같은 민간형 일자리 운영에 있어 채용을 꺼리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마련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인터뷰 결과

... 예를 들면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가이드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개발을 해서 교육을 해서 참석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가이드를 만들긴 했는데 이 가이드가 정말 제대로 된 가이드인지 올바른 가이드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지원해줘야 할 것 같아요 (도시a)

## 2. 광역단위 지자체 및 지역본부 역할 및 기능

### □ 광역단위의 노인일자리 추진 기반 마련

- 앞서 지역단위의 조례 지정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확인함. 이와 관련하여 시도 단위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인됨.
- 특히, 광역단위의 지자체 뿐만 아니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및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함.

### 인터뷰 결과

“광역단위에서 노인일자리 추진과 관련한 조례 지정을 위해서 노력해줘야 해요. 시도 단위에서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노인일 자리를 활성화해 나가는 사례들이 늘어나면, 전국단위로 잘 퍼져 나갈 겁니다. 예전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처럼 아마 잘 퍼져나갈거예요. 다만, 이런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 담당자들이 노력을 좀 해줘야 합니다.”(도농복합a)

“저희도 조례가 지정되고 나서 일자리 수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시도 단위에서 공무원들이 열의를 갖고 추진하면 조례 지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광역시도 지자체에서 의견을 계속 내고, 이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해요. 개발원도 시도에서 이런 조례가 지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겠고요.”(도농복합c)

##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운영 가이드라인 및 교육과정 마련

-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배부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수행됨.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운영지침이라는 특성 상,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준의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어, 운영지침만을 토대로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을 확인함.

---

**인터뷰 결과**


---

“광역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수행기관은 말 그대로 받아서 직접 수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운영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철저히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되더라고요.”(도시c)

---

“각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는 발굴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어떻게 뽑아서 운영을 할 거고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고요. 그런 지원적인 역할을 광역 전담 부서에서 맡아주셔야 되겠죠”(도농복합 b)

---

- 시장형사업단이나 시니어인턴십 등 민간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광역 또는 권역 단위에서 지역 내 산업적 특성에 맞는 표준화된 운영 프로세스 및 운영 모델을 제시해준다면 지역중심의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함.

### 인터뷰 결과

“기존에 진행했던 생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들어가서 일반 프랜차이즈 운영방식을 차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역내 유통망이나 기업, 농산물 등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주는거죠.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역할이나 기능은 광역차원에서나 개발원에서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도농복합 a).”

“인테리어와 제품 유통과 메뉴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이거를 두 곳 세 곳 만들고 이거는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 방식에 참여할 기관들이 앞으로 하나 두 개 신규 점포를 그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가맹으로 들어오고 기존 점포들은 그냥 두거나 교체하거나 이렇게 흡수하는 방식으로 공동 브랜드와 공동 사업의 형식으로 바꿔주시면 몇 년 안에 너무 좋으니까 들어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농촌 a).”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주형 일자리 같은 고민이 광역 단위에서는 늘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장형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개별 기관이 다 떡집 하고 있고 세탁소 하고 있고 두부 집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잘 엮어지면 또 제안들이 계속 되고 추가적인 참여를 하게 되면 더 지원을 한다는 방식을 해서 이게 다 엮어서 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브랜드와 전체적인 사업의 그림을 보고 개별 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판을 짜는 다 개별 기관이 두부 집 내고 임대하고 이런 방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노인 일자리가 서울의 협동조합 같은 어디는 유통을 하고 어디는 목장에서 소를 키우고 어디는 패키징을 하는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연결되는 방식으로도 하나쯤은 나와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도농복합 b)”

- 더불어, 참여노인 교육 및 전담인력(종사자) 교육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 및 수시 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또한 시도 단위의 광역의 역할로 제시됨.
-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경우,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수시로 참여 가능한 형태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함.

### 인터뷰 결과

“..센터 종사자들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 같은 것들 들어오셔서도 굉장히 많이 만족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사업 수행하시면서 느끼셨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거나 매뉴얼을 만들어 드리거나 지침을 만들어 드림으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요. 또 현장에서 어려운 애로사항 같은 것들도 저희한테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달 체계 관련해서도 일자리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상의하달 일방적인 상의하달보다는 아래에서 또 요구하고 애로 사항이 있고 만족도는 어떻고 하는 것들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창구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도시 c)”

“사실 개발원이 만든 그 교육만 가지고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고 지방이 현실에 많이 동떨어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자체와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와 지역본부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도 생각하고요.(도농복합 b)”

“개발원과 지역본부, 광역단위에 전문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지역 현실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노인일자리 참여자,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틀에 대해 논의해야 교육, 훈련이 체계화 되지...(농촌c)”

□ 광역 단위 유관기관과의 협업, 소통 강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중심의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내 인적, 물적 인프라 활용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 제도상에는 지역협의체 및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갖추어져 있으나, 여타 지역복지사업이나 지역일자리 사업과 비교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지역거버넌스가 약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및 실효성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단위의 지자체와 개발원 지역본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함.
- 더불어, 중앙기관과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음.

**인터뷰 결과**

“광역단체하고 지역 본부하고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네트워크라는 게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얘기하자.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계 유지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도 마련이 돼서 개발원 차원에서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역 본부하고 광역 지자체 내지는 광역지원센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도농복합 b).”

“중앙정부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자체나 기초 단위의 광역 단위의 단체장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중앙정부로 전달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다이렉트로 중앙정부하고 현장하고 이렇게 안 된다면 지자체나 광역 단위에서 그런 역할 중간 다리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도농복합 a)

“지자체와의 담당 부서와의 협업은 무엇보다 기관과 원활한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운영 기간 운영비 같은 경우는 100% 균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 운영비는 지자체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 실정으로는 따라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 그리고 군과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의 다양한 노력화 그리고 방법론 이런 것들을 여러 시각에서 제안을 해주신다고 하면 더 현장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도시 c)”



### 3. 기초단위 지자체 및 수행기관 역할, 기능

- 기초단위 수행기관에서는 사업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됨.

#### 인터뷰 결과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서는 무엇보다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거죠. 투명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사업량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더 집중해가지고 양질의 성과를 내는 게 수행 기관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도시 a)

- 기초지자체 단위의 수행기관은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행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포괄적이고 업무범위가 광범위하여 실질적인 사업운영에 집중하기 어려운 한계도 함께 제시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역단위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운영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수행기관은 사업운영에 집중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터뷰 결과

“수행기관 같은 경우는 더 잘하고 싶은데 인력, 예산, 물적 인프라가 부족해요. 지금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모집부터 수요처 발굴에 시장형사업단은 사업 운영까지 다 해야 하는데 인프라는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고.. 수행기관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참여자 모집, 교육, 연계, 관리 이런 실질적인 사업운영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농촌b)

## 제5절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통합관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확장 가능성

###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은 수행기관 단위의 칸막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 내 일자리 수요공급에 대한 정보 공유나 일자리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수행기관 단위에서 벗어나 지역내 수요공급적 특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기반을 확보하고자 광역단위의 거점기관(통합지원센터, 지역본부 등)도 점차 확대해 왔지만, 여전히 개별 수행기관 단위에서 공공부문 위주, 획일적/단순근로 중심의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함.
-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내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통합운영 및 관리체계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일자리 플랫폼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그림4-1〉 현행 노인일자리 디지털 플랫폼



출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

### 1)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업무시스템) 운영 현황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온라인 정보시스템으로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목적)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은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통합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위해 구축된 온라인 시스템으로, 각 수행기관에서 계획,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음.
- (활용 주체) 사업운영에 대한 통합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목적으로 구축된 일자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지자체,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사업 담당자와 수요처(기업 등), 관리기관인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 담당자가 활용 주체임.
- (기능) 과거에는 사업운영에 해당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 및 고령인력 수요처를 대상으로 온라인 일자리정보 창구를 확대하여 대국민 비대면 일자리 신청 서비스 및 수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 개선함.
  - (정부24 연계) 정부서비스·민원·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부 대표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기능 오픈
  - (보조금24 연계) 복지보조금 및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보조금24」에서 개인별 서비스 수혜여부 정보를 제공
  - (민간사이트 연계 추진) 중장년일자리를 제공하는 토스 앱과 노인일자리 모집정보 연계 제공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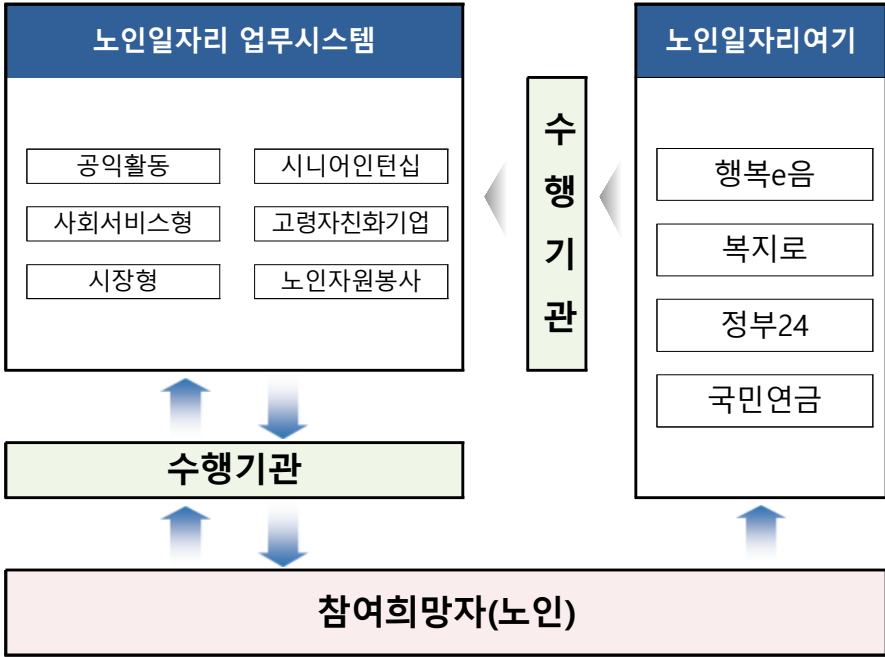
## 2) 노인일자리 대민 정보 사이트 운영 현황

- 노인일자리에 대한 소개 및 구인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여기” 사이트를 운영 중임.
- (목적 및 기능) 노인일자리여기는 노인일 자리를 소개하고 참여방법을 안내하는 사이트로 보건복지부 노인일 자리에 관한 검색기능과 워크넷 및 타 기관 노인일 자리 사이트 연계기능을 갖고 있으며, 일자리유형, 일자리 참여방법 및 전국 수행기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음.
- 최근에는 사이트 접근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모바일 웹 등도 운영하고 있음
  - (대민사이트 최신화) 대민사이트 콘텐츠 최신화, 웹접근성 갱신, 웹취약점 조치, 수요자 의견 적극적 수용
  - 노인일자리여기’ 사이트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인일 자리 참여기능 개선 및 연계 확대 추진
  - (모바일웹 접근성 품질 인증) 모바일웹 접근성 품질 인증
- (활용주체) 노인일 자리사업 소개, 참여 방법, 전국 수행기관 정보 제공 등 노인일 자리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소개에 집중하여, 노인일 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참여 희망자가 주요 활용 대상임.

## 3) 노인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문제점 및 한계

- 이상에서 살펴본 ‘노인일 자리 업무시스템’과 ‘노인일 자리여기’가 가지고 있는 주요 한계는 아래와 같음.
- (수행기관만 참여등록 가능) 노인일 자리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이 오프라인 신청절차를 통해 사업단에 등록 후 참여 가능

〈그림4-2〉 노인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참여 신청



참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시 수행기관이 확인 후 오프라인 신청절차 등록 가능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

- (기업체 등 구인처의 온라인 접근창구 부재)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체가 노인자원을 조회하거나 구인신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부재
-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등 타 기관 일자리 플랫폼에 비해 그 기능이 매우 단순화 되고 있고, 일자리 수요공급에 대한 정보공유, 연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노인일자리사업내에서 디지털 기반 온라인 플랫폼 활용은 매우 제한적임.

## 2. 디지털 기반 노인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쟁점

### 1) 노인일자리사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수립

- 2016년 다보스포럼 이후 본격 추진된 4차산업 관련 정책은 코로나 위기를 통해 노인복지 분야에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함. I-KOREA 4.0 계획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개편되었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대로 진입하여 모든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정책보고서에는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관련하여 ‘취약계층의 불편 해소를 위한 디지털 기술서비스 개발’ 정책이 들어가 있지만 노인일자리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 노인일자리사업 영역에서 디지털 전환 전략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DNA(Data, Network, Artificial Intelligence) 사업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노인일자리사업 영역에 디지털 전환 R&D가 확대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전략 보고서가 필요함
  
- 디지털 전환이란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전략임.<sup>3)</sup>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가치 창출에 있음.<sup>4)</sup>
  - 지역주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 중심으로 조직 운영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함.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과 사업수행 인력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사업을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자료: <https://digitaltransformation.co.kr/>

4) 자료: <https://digitaltransformation.co.kr/>

- 노인일자리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을 위한 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 전달체계의 디지털 인프라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및 전략 수립이 요구됨.
- <그림 4-3>은 1990년대 인터넷 환경이 발달하면서 대두된 일반 조직의 디지털 전환 단계를 보여주고 있음. 노인일자리사업 영역에서도 ICT기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온라인 기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발달 환경에 적합한 사업 모델은 기획이 미흡한 단계임.
- 급변하는 4차 산업 기술을 노인일자리사업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됨.

<그림4-3> 일반 조직의 디지털 전환 단계 개념도



출처 : <https://digitaltransformation.co.kr/>



## 2) 디지털 기반 노인일자리사업 환경 개선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행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과 “노인일자리여기”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수요자 맞춤 빅데이터 구축의 관점에서 접근.
- 지역주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의 전환과 함께 전국단위의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지표를 재검토하고, 이에 맞춤형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축.
- 노인일자리 구직자와 수요자간의 연결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노인일자리사업 통합플랫폼 개발.

〈그림4-4〉 민간 영역의 플랫폼 예시



〈케어닥(간병인력 매칭서비스)〉



〈웰로(맞춤 복지정보 제공 서비스)〉



### 당신의 시간제 직원, 이지태스크

요새 누가 혼자 일 다 하나요?  
1-2시간 도움 필요한 간단 업무는 이지태스크에서

업무 맡기기

〈이지태스크(중장년 일감 매칭 서비스)〉



### Work & Jobs

Get expert career advice and every experienced worker's



**JOB SEARCH**  
20 Jobs That Will Be in Demand in 2023

Chef, nurse and teacher are some of the careers where hiring will 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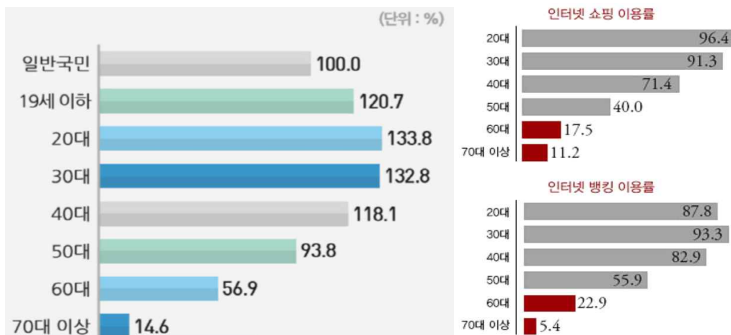
〈미국 AARP 50+ 일자리 관련 사이트〉

### 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디지털 역량 제고

□ 지역주도 노인일자리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들의 디지털 격차해소가 시급한 과제임. 최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새로운 노인일자리가 창출되는 추세이고, 수행기관의 근로환경도 스마트워크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표한 '2019 디지털 정보화 수준' 결과를 보면 일반 국민의 수준을 100.0으로 보았을 때 고령층의 경우 64.3로 가장 낮고, 장애인(75.2), 저소득층(87.8), 농어민(70.6) 등 순으로 밝혀짐.<sup>5)</sup>

〈그림4-5〉 연령대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6)7)8)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직무 관련 디지털 역량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노인일자리여기 사이트 활용도를 높이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리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실무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복지 기술 보수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함.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SAZJUW>.  
 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7)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SAZJUW>  
 8)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598100012&ctcd=C02>

# 제 5 장

##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언

제2절 후속연구 제언



# 5

## 결론 및 제언 <<

### 제1절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양적, 질적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둬.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중장년 일자리 사례분석을 통해 운영체제와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현장 전문가 및 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조사를 통해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추진 상 한계와 개선 방향을 탐색함.
-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언함.

#### 1. 지역자율성 및 적극성 확보 기반조성

##### 1) 지역중심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앙중심의 정책을 지역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해당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준으로 관련 조례 제정이 수반되어야 함. 조례의 제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전제조건이며, 사업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 정당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

소로 볼 수 있음.

-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사업과 전북지역 노인일자리사업이 체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는 전제조건 중 하나도 노인일자리(중장년 일자리)사업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축 및 노인일자리 데이터 구축,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관리에 대한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임.
-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성과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광역단위 및 기초단위 지자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2) 지역자율형 예산 및 운영지원 확대

-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본 연구결과에서도 지역주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제조건 가운데 지역 자율형 예산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을 확인함.
-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별로 노동시장과 노인의 일자리 수요에 따라 그 유형에 있어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고 있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유동적 시장변화나 중도 탈락자 등의 발생으로 계획대비 집행률에 있어서도 지역간 편차가 존재함.<sup>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의 권한과 예산배분 등에 대한 핵심 기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음.
- 일자리 정책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정책역량이 축적되기 힘든 근본적인 제약이 존재함. 급속하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지역의 산업과 노동시장 환경에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 수요에 대응하

9) 실제로 2021년도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의 경우 서울과 대구,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은 배정사업량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은 배정사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편차 발생함.

기 위해 지역의 권한 강화는 필수적임(이상호 외, 2021).

-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재정지원은 노인일자리 재정사업의 유형에 따라 특정보조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개별사업의 불용액발생시 잔여예산 반납으로 인한 예산활용의 효율성 저해할 수 있음.
- 예컨대, 노인일자리 재정배분 체계를 현행 유형별 특정보조금<sup>10)</sup> 형태에서 포괄보조금으로 지원될 경우 지역에서는 유형별 보조금의 불용액 발생 시 예산이 부족한 유형에 투입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기할 수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할 수 있음.
- 노인일자리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의 연계성 그리고 지역주도의 맞춤형 노인일 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포괄보조로 전환할 경우 재정운영의 자율성 강화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의 계획과정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행정의 책임이 약화될 우려도 존재함.
  -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예산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예산조정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행정의 추가업무가 가중되는 단점이 있음. 결국, 노인일자리 재정지원체계의 개편은 지역마다 상이한 노인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인일자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맞춤형 노인일 자리를 안착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에서는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통제하

10) 국고보조금 제도는 용도지정과 지방정부의 부담금 여부에 따라 크게 일반보조금과 특별보조금 그리고 포괄보조금으로 분류함.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핵심목표 또는 기능별 사업군 포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받은 예산을 해당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특별보조금보다도 지역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사업계획과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한편, 포괄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별보조금에 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함께 계획수립에 있어 자율성이 강한 특징이 있음(조재환·이한성, 2013 재인용).

고 예산을 체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사업을 한 단계 고도화하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5-1〉 노인일자리 재정지원체계 장단점 비교

	장점	단점
특별보조금 (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 사업의 체계적 계획수립 추동</li> <li>·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목표량 달성을 위한 노력 경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유동적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미흡</li> <li>· 노인일자리 유형별 불용액 발생시 반납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 재정운영 저해</li> </ul>
포괄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별 재정운영의 자율성 효율성 재고</li> <li>· 지역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노인일자리 수요의 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li> <li>·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설계 및 집행 가능</li> <li>·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건전한 경쟁관계 유인 (예산추가 투입을 위한 노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일자리 사업 계획과정의 부실화 우려</li> <li>· 노인일자리 사업 행정책임의 약화 우려</li> <li>· 노인일자리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산조정으로 행정인력의 추가 업무 가중</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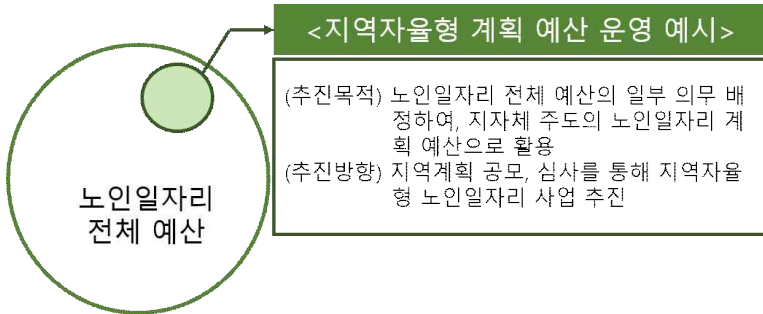
### 3) 공모형 사업 등을 통한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 도모

- 지역주도의 노인일자리 강화를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사업대상과 지원금액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과는 다른 형태의 자율적 사업계획과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
- 예컨대, 매년 노인일자리 예산의 일부를 자율 예산으로 배정하여 지역의 자율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공모를 통해 창의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기반 마련.
- 노인일자리 지역자율 계획예산은 일자리 참여노인 대상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지역자율로 계획하게 하고 지역주도의 계획에 따른 공모와 심사를 통해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으로 추진.
-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해 제안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되 사업추진 후에는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지속사업 여부에 대한 심의 후



연차별 예산 지원을 검토함.

〈그림5-1〉 지역자율형 계획 예산 운영 예시



## 2. 광역 및 권역별 노인일자리 컨트롤타워 중심의 지역거버넌스 구축

-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각 지역별로 지리적, 구조적 특성 등은 상이하지만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필수요소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음.
- 먼저 광역 및 권역단위의 노인일자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임. 노인일자리사업 전달체계상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일자리사업 수요 조사, 기획관리, 성과 평가 등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통합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부재함.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중심의 노인일자리 확충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움.
  - 광역 및 권역단위의 전담기관을 통해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함.
- 더불어, 광역단위, 기초지자체 단위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필요함. 현행 제도상, 지역협의체 및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갖추어져 있으나 여타 지역복지사업이

나 지역일자리 사업과 비교하여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지역거버넌스가 약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임.

- 향후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양적, 질적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중앙과 지역 간에는 광역단위의 전담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기획,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광역단위 지자체와 기초단위 지자체 간에는 전담 공무원 또는 전담 인력의 지속성, 책임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1~2년 단위의 순환보직으로 정해지는 노인일자리 전담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나 책임성, 적극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 3. 지역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제안 및 지원체계 마련

-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을 유형화 하고, 지역유형별 노인일자리 추진 모형을 제안하는 것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지역 유형화에 따른 맞춤 노인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편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임.
- 기초지자체 수준의 소규모 지역에서도 지역유형화를 통해 제시된 일자리 모형을 토대로 몇 가지 선택 가능한 사업 유형을 선택할 수 있고, 정책 수단 조합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 등 상위 수준의 정책을 기획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시장형사업단이나 시니어인턴십 등 민간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산업

을 활용한 표준화된 사업 운영 프로세스 및 운영 모델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이 보편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고 일정 수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량 배분 및 전반적인 운영관리는 중앙정부의 역할로 가져야 할 것임. 지역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 수행하는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함.
  - 지역에서는 지역 내 인적, 물적 인프라와 일자리 수요공급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일자리 전략을 수립, 시행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중앙에서는 사업 수행 단계에서 지역이 자율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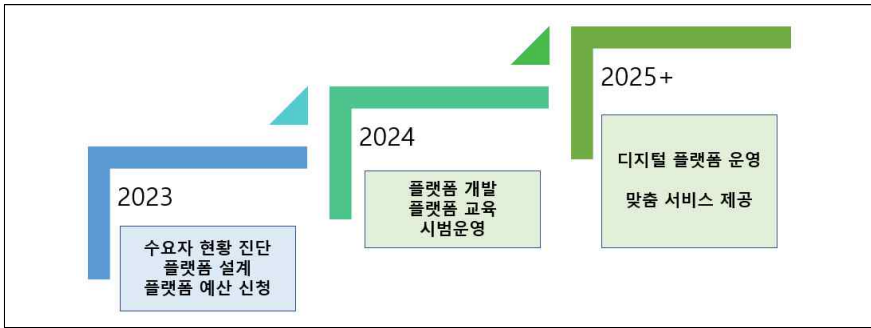
#### 4. 디지털 기반 노인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및 활성화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은 수행기관 단위의 칸막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동일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 단위로 일자리 참여자와 수요처에 대한 정보가 달라 일자리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함.
- 수행기관 단위에서 지역단위 일자리의 양적, 질적 확충을 위해서 지역 내 일자리 정보공유 및 정보 접근성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기반 노인일자리 플랫폼을 구축, 활용함으로써 기초지자체 단위의 일자리 정보, 광역단위의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구인구직 매칭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1단계에서는 현행 온라인 시스템 운영 현황을 심층분석하고 관계자들의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고도화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원 확보해야 할 것임.
  - 디지털 기반 노인일자리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심 있는 중고령자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갖춘 통합 플랫폼을 설계함으로써 정보제공, 수요-공급 연계, 네트워크, 교육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음.

-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림5-2〉 디지털 기반 노인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안)



## 제2절 후속연구 제안

□ 본 연구에서는 지역중심의 노인일자리 확충을 전달체계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언함. 특히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보편성과 공공성을 살리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영체계 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음.

□ 다만, 본 연구는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행 운영체계상 한계와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기초연구이므로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개선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더불어, 지역중심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지역이 중심이 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필요성과 사회적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함. 지역중심 노인일자리사업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 및 실행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조사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 부록 &lt;&lt;

[부록표1]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기준 : 2021년, 단위 : 개, 천명, %)

지역 구분	노인일자리 배정사업량	노인 인구수	기초연금 수급자수		경제활동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	
			비율	수급률		참가율	
총계	829,596	8,851	17.1	5,973	67.6	3,112	36.3
서울	73,760	1,598	16.8	884	55.5	434	27.9
부산	53,715	682	20.4	492	72.3	204	30.9
대구	28,951	417	17.5	292	70.0	122	29.8
인천	44,652	435	14.8	318	73.2	139	32.8
광주	27,472	213	14.8	144	67.4	73	33.9
대전	19,798	221	15.2	146	66.2	75	34.2
울산	13,207	153	13.6	101	66.1	46	31.0
세종	3,430	38	10.1	22	58.0	13	37.2
경기	91,471	1,882	13.9	1,183	63.0	577	31.4
강원	57,712	333	21.7	233	70.1	147	46.1
충북	31,264	302	18.9	217	72.0	116	39.7
충남	38,080	420	19.8	309	73.7	181	44.7
전북	62,983	398	22.3	301	75.8	183	47.8
전남	52,031	445	24.3	359	80.7	220	53.1
경북	52,014	596	22.7	454	76.2	274	47.9
경남	51,533	608	18.4	449	73.8	253	43.4
제주	11,159	111	16.3	69	62.4	55	51.4

자료 : 65세 이상 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2022.

기초연금수급자수는 보건복지부, 「2021 통계로 본 기초연금」, 2022.

경제활동참가율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2.

[부록표2] 지역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배정량

(기준 : 2021.12.31., 단위 : 개)

지역 구분	배정 사업량	유형별						
		공공형		민간형				사회 서비스형
		공익 활동	재능 나눔	취업 알선형	시장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합계	829,596	607,651	15,024	77,985	36,072	36,488	2,000	54,376
서울	73,760	62,631		1,653	4,589			4,887
부산	53,715	43,022		1,100	3,820			5,773
대구	28,951	24,650		530	910			2,861
인천	44,652	37,750		810	2,520			3,572
광주	27,472	23,673		830	1,450			1,519
대전	19,798	16,909		270	1,170			1,449
울산	13,207	11,059		410	600			1,138
세종	3,430	2,752		230	108			340
경기	91,471	74,784		2,170	5,711			8,806
강원	57,712	51,212		760	3,137			2,603
충북	31,264	27,477		690	1,172			1,925
충남	38,080	31,758		570	2,000			3,752
전북	62,983	54,989		1,230	2,386			4,378
전남	52,031	46,827		450	1,810			2,944
경북	52,014	45,097		1,210	2,003			3,704
경남	51,533	43,633		2,020	2,236			3,644
제주	11,159	9,428		200	450			1,081

주1) : 배정사업량은 승인된 사업의 총량으로, 지자체 자체예산 추진사업분이 포함되어 있어 목표사업량 및 확정내시 사업량과 차이 발생,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매월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Database, 2021.

[부록표3] 지역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실적

(기준 : 2021.12.31., 단위 : 명)

지역 구분	추진실적 (참여노인)	유형별						
		공공형		민간형				사회 서비스형
		공익 활동	재능 나눔	취업 알선형	시장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합계	836,172	610,656	15,152	70,334	40,539	34,434	1,999	63,058
서울	88,169	61,091	1,613	6,433	4,996	8,072	406	5,558
부산	65,705	44,278	580	6,024	4,406	3,175	212	7,030
대구	35,826	24,578	1,078	3,503	986	2,424	61	3,196
인천	51,177	39,070	106	2,650	3,022	2,119	99	4,111
광주	32,502	25,841	325	1,826	1,692	946	35	1,837
대전	22,803	16,631	470	1,605	1,291	1,140	88	1,578
울산	15,863	11,242	140	1,381	643	1,125	23	1,309
세종	5,716	2,661	79	1,236	121	1,234	5	380
경기	109,604	75,445	2,333	11,400	6,454	3,526	253	10,193
강원	62,981	49,970	631	4,382	3,428	1,134	112	3,324
충북	36,528	27,770	502	4,033	1,275	620	123	2,205
충남	43,970	31,460	1,127	3,812	2,282	976	87	4,226
전북	71,490	55,734	1,740	4,501	2,644	1,738	92	5,041
전남	58,877	46,514	1,968	4,364	2,001	755	9	3,266
경북	60,280	45,300	875	4,926	2,213	2,294	224	4,448
경남	62,702	43,890	1,383	7,746	2,512	2,950	58	4,163
제주	11,979	9,181	202	512	573	206	112	1,193

주1) : 추진실적 중, 공익활동은 '누적참여자수 - 중도포기자수'로 산출하며, 그 외 모든 사업은 '누적참여자수'로 산출.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Database, 2021.



[부록표4] 지역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정현황 (지자체경상보조사업)

(기준 : 2021.12.31., 단위 : 개)

지역구 분	배정 사업량	수행기관수	유형별				
			지자 체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복지관	기타
총계	829,596	1,291	141	186	204	457	303
서울	73,760	226	21	18	26	100	61
부산	53,715	105	4	16	15	62	8
대구	28,951	42	8	8	-	20	6
인천	44,652	48	7	2	1	19	19
광주	27,472	58	-	5	6	17	30
대전	19,798	43	6	4	6	15	12
울산	13,207	28	5	5	5	12	1
세종	3,430	10	-	1	1	2	6
경기	91,471	183	16	24	38	71	34
강원	57,712	69	6	13	14	18	18
충북	31,264	46	4	12	10	17	3
충남	38,080	64	5	14	15	21	9
전북	62,983	105	10	15	15	27	38
전남	52,031	86	20	10	19	23	14
경북	52,014	64	11	15	13	7	18
경남	51,533	103	16	22	18	23	24
제주	11,159	11	2	2	2	3	2

참고1 : 수행기관은 사업유형별 중복 제외함.

참고2 : 복지관은 노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을 포함함. 기타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역문화원 등을 포함함.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Database, 2021.

[부록표5] 지역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운영 현황(지자체경상보조사업)

(기준 : 2021.12.31., 단위 : 개, 명)

지역구분	배정 사업량	수행기관수	전담인력수	사업단수	1개 기관당 평균 운영현황	
					사업단수	참여자수
총계	829,596	1,291	5,203	10,586	8.2	638.6
서울	73,760	226	568	1,279	5.7	375.6
부산	53,715	105	408	1,034	9.8	617.0
대구	28,951	42	216	396	9.4	796.0
인천	44,652	48	346	520	10.8	1,116.4
광주	27,472	58	244	353	6.1	579.6
대전	19,798	43	115	273	6.3	529.3
울산	13,207	28	107	231	8.3	551.0
세종	3,430	10	36	61	6.1	386.8
경기	91,471	183	645	1,699	9.3	591.0
강원	57,712	69	397	613	8.9	936.7
충북	31,264	46	182	412	9.0	789.4
충남	38,080	64	283	613	9.6	672.4
전북	62,983	105	492	896	8.5	680.5
전남	52,031	86	375	708	8.2	678.1
경북	52,014	64	310	583	9.1	928.0
경남	51,533	103	392	804	7.8	567.5
제주	11,159	11	87	111	10.1	1,122.7

참고 : 수행기관은 사업유형별 중복 제외함.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정보시스템(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Database, 2021.

## 참고문헌 <<

- 강소랑, 한창목. (2021). 서울시50플러스센터 지원체계 구축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 고경호. (2021). 농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쟁점 및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지역 내 민간위탁형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지역을 사례로 . 한국요기농업학회지, 29(1), pp.51-7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관계부처합동.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6.16.
- 관계부처합동.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020,12,
- 김문정, 김진, 백혜연, 김가원, 박병현, 성경하. (2021). 2021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선기, 박승규, 전대욱, 최인수.(2011).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수린, 남기철, 최혜지, 정세미, 신희균, 이하진.(2019). 노인일자리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행기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김우주. (2016).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국회예산처.
- 변금선, 최혜지, 한동우, 김형용, 신유미, 윤기연, 송명호, (2018). 가칭 통합형 노인일자리 센터 모형 구축을 위한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석재은, 김형용, 허남재, 정선아, 한은영, 김명숙.(2017).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확산 연구.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윤동열, 주무현, 고혜원, 김유빈, 강지원, 김지운, 정동열. (2022). 2021 재정사업 심층평가: 직접일자리사업군. 기획재정부.
- 윤윤규.(2009). 지역산업 정책의 고용영향 분석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 (2013). 한국지역고용정책의 현황 및 쟁점. 한국노동연구원.
- 이상호, 서룡, 박선미, 황규성, 김필.(202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한국고용정보원.
- 이소정, 김수린, 최유진, 백학영, 김형돈, 이하진. (2020).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노인 일자리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이현진, 김흥주.(2015). 생협복지의 의미와 실천 : 서울 올림두레생협 사례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16(2), pp.311-351.
- 전명숙·임상훈(2008), 새로운 지역고용거버넌스와 노사정의 역할, 한국의 고용과 능력개발을 위한 지역거버넌스 증진에 관한 국제회의 자료.
- 정한나, 김준영, 이상호, 박세정, 전명숙. (2019). 지역 노동시장 분석 :최근 지역 고용동향 이슈를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2022년 5월.
- 지규욱.(2015). 지역사회복지 실천모델로서의 협동조합운동, 사회복지정책, 42(1), pp.187-210.
- 조재환, 이한성.(2013). 지방농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농림수산 포괄보조금제 운영방안, 한국농촌경제학회, 19(2), pp.145-155.
- 한부영, 권오철. (2016).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황경란, 최성은. (2021). 지역주도형 중장년 일자리 현황 및 사례분석. 경기복지재단.
- 황경란, 최조순, 주경희, 박혜선, 홍서인.(2018).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활성화 방안 연구. 경기복지재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동향.
- Potter, J. and M. Marchese (2010), A Review of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Policy Approaches in OECD Countries: Policy Audits, OECD 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LEED) Papers, No. 2010/06, OECD Publishing, Paris.

## Abstract <<

### A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Delivery System to Expand Locally-Based Senior Employment

Project Head : Kim, Moonjung<sup>11)</sup>

This study set out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ESAP) for its expansion and development with a focus on local areas by mitigating limitations with its central government-led practice and focusing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 Table 1 shows the study's overall composition, main content, and methodology.

<Table 1> The study's composition and methods to push forward the content

Category	Composition	Content	Method
1	Need for and significance of locally-based senior emplo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Reviewing theories about the concept of locally-based jobs</li><li>- Reviewing the delivery system of locally-based jobs and providing implications</li></ul>	Literature review
2	Review of policy cases for locally-based jobs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Reviewing the management system of representative locally-based job projects pushed forwar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viding implications</li></ul>	Literature review Consultation and opinions from experts

11) Co-Researchers: Park, Yeongran

Category	Composition	Content	Method
3	Problems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in the management of locally-based senior employment	- Examining the management limitations of expanding locally-based senior employment based on the perceptions of field experts and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ir future improvement	FGI survey Consultation and opinions
4	Proposal of measures to improve the delivery system of locally-based senior employment	- Proposing measures to reestablish the roles and functions of each management subject and increase their management efficiency to expand locally-based senior employment based on main findings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identified a couple of preconditions to push forward locally-based SESAP. The preconditions to expand locally-based senior employment include 1) establishing a set of institutional and legal criteria, 2) securing the autonomy of locally-based budgets, and 3) activating a network with concerned agencies in the community.

In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criteria, larger areas had relatively strong desire for setting guideline criteria to push forward a project, prescribing ordinances at a local unit, and building a local autonomy-based business model(including an evaluation model). There was common desire for securing a budget to push forward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jobs and promoting regular communication among the subjects of management.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had strong desire for the activation of a network with concerned agencies due to their relative lack of human and physical infrastructure.

As for the directions of reestablishing the roles and functions of each management subject, bo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for the Aged raised a need to 1)

establish guidelines and criteria, 2) make efforts to reset the allocation methods for budgets and business volumes, and 3) build an educational system for non-scheduled education to push forward senior employment autonomously at the local level.

Wide-area local governments, local headquarters, and supportive agencies for jobs expressed a need to 1) establish a detailed set of guidelines for business management, 2) promote a network with concerned agencies, and 3) conduct a factual survey(needs survey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on the demand and supply of jobs.

These findings raise a need for a management system in which the execution agencies of primary local governments can focus on businesses(participant recruitment, connection, and management) practically as these agencies at the central and wide-area level build a foundation to push forward systematic locally-based projects.

The present study moved further from the level of developing and managing job items fit for the local characteristics in previous studies and had contemplation over the preconditions to build a basis to rone systematic SESAP, the directions of reestablishing the roles and functions of each management subject, and measures to increase management efficiency including the utilization of a job platform, thus holding its significance.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management basis to expand locally-based senior employment and the creation of sustainable jobs for the elderly.

지역중심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발행일	2022년 12월 인쇄 2022년 12월 발행
발행인	김미곤
발행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연구조사센터 대표전화 1566 - 0151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 대표전화 02-313-7593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